제1편

시민운동과 주민자치

제1장 시민운동의 대두와 성장
제2장 주민자치와 참여정치
제3장 아파트문화와 생활공동체운동

제1장 시민운동의 대두와 성장

이대수 | 군포환경자치시민회 대표

군포시는 1990년대 초반 수도권 5개 신도시 건설의 일환으로 인구 17만여 명을 수용하는 규모의 산본 신도시가 건설되어 급격한 인구유입과 도시구조의 변화를 겪었다. 현재는 인구 28만여 명의 중소도시에 해당하며, 도시와 농촌, 공업지역과 상업지역이 병존하는 곳이다. 수리산으로 둘러싸인 천혜의 자연조건을 지녔고, 고속도로와 전철의 연계망이 잘 이루어져 교통이 편리한 도시이

시민단체의 가두서명운동

다. 정치적으로는 여야가 형평을 이루고 있으며, 시민의 성향은 약간 진취적인 편으로 평가되고 시민운동도 활발한 곳이다.

1. 시민운동의 발아

군포 지역의 시민운동은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안양권의 노동운동과 민주화운동에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되다가 1980년대 후반을 지나 1990년대 초반에 이르러 독자적인 지역운동으로 자리잡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지역 내부적으로는 이미 1980년대 중반에 민중교회[1]들이 설립되면서 노동운동을 지원하거나 주민운동을 시도하고 있었다. 한무리교회와 돌샘교회 등의 민중교회는 탁아소(어린이집)와 공부방을 설치 · 운영하였고, 노동야학도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민중교회들은 산본 신도시 개발 전에 존재했던 산본리 비닐하우스 철거지역 지원 활동이나 기업체 노동자들의 노조 설립을 지원하는 활동도 펼쳤다.

초기 주민운동의 예로는 돌샘교회를 중심으로 진행된 '리세(理稅) 납부거부운동' 을 들 수 있다. 당시 농촌에서는 리사무소 운영과 이장의 활동비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 관행적으로 리세를 걷고 있었다. 그러나 이미 상당히 도시화된 산본리 지역에서, 전출입 서류 확인을 명분으로 리세를 징수하는 것은 부적절한 일이라고 할 수밖에 없었다. 이 운동을 주도한 이들은 군포읍사무소로부터 리세 징수의 부당함을 인정하는 공문을 받아 '불법적인 리운영비 강제징수를 거부합시다' 라는 유인물을 주민에게 배포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로 인해 리세를 재정기반으로 주민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했던 이장단과의 마찰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군포읍이 시로 승격하고 주민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1990년대 들어서는 시민운동도 체계를 갖추고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군포시 최초의 시민단체라고 할 수 있는 '군포시민의모임' 이 1992년 11월 7일 창립하였다. 이 단체는 1992년 3월부터 무공해 비누만들기와 지역신문(소식지) 제작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창립하였는데, 이로써 군포시에서 시민운동이 본격화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되었다.

이후 1993년 5월에는 군포시민의모임을 주축으로 관내 종교단체가 참여한 'TV수신료 분리고지 군포시민공동대책위원회' 가 발족하였다. 대책위원회는 'KBS 수신료 분리고지 및 공영방송 바

1) 민중교회 운동은 1980년대 초반부터 진보적 기독교단 출신 목회자를 중심으로 촉발되었다. 당시 공단과 빈민지역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민중운동을 지원하고 연대하는 활동이 이루어졌고, 그 후에는 외국인 노동자지원 사회복지 활동 등에 주력하고 있다.

로세우기 운동' 을 전개하였는데, 이는 군포 지역 최초의 연대 활동으로, 전국적으로 공영방송 바로세우기 활동이 진행되었던 경험을 배경으로 한다. 당시 군포시 관내에는 일부 난시청지대가 있었는데도 수신료를 전기료에 합산하여 일괄 징수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로 인해 주민운동이 촉발된 것이다. 당시 대책위원회는 주민 1만 8,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시의회에 조례개정안을 상정하였고, 시의원들을 설득하면서 분리징수 청원활동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 의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분리 고지를 원하는 주민의 뜻을 반영한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당시 관선이던 신중대 시장의 거부권 행사로 시행되지 못하였다.

2. 소각장 건설과 시민의 대응[2)]

군포 지역 시민운동의 원류를 형성한 사건은 쓰레기소각장(현 군포환경관리소) 건설로 시작된 시민들의 대응이었다. 소각장 건설 문제는 10년 이상에 걸쳐 내 · 외부적으로 많은 논란과 관심을 불러일으킨 사건인데, 그 과정을 '쓰레기소각장 설치 반대운동(1990년~1995년 6월)', '김포매립지 쓰레기 반입중지와 새 부지선정 논란(1995년 7월~1997년 8월)', '소각장 착공과 지방선거(1997년 8월~1998년 6월)', '민 · 관 협력과 소각장 준공(1998년 7월~2001년 6월)', '소각장 가동 이후(2001년 6월 이후)' 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1) 쓰레기소각장 설치 반대운동

(1) 성급한 소각정책과 밀실행정

1989년 노태우정부의 주택 200만 호 건설 계획이 발표되고 5개 신도시 건설이 시작되면서 산본 신도시 건설 기본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쓰레기소각장 건설이 주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추진되었다. 1990년 5월 당시 환경처는 산본 신도시 내에 200t 용량의 소각장을 건설하도록 군포시에 요구했고, 시는 신도시 건설 시행사인 주택공사(이하 '주공')의 부담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4개 후보지를 선정하여 주공에 통보하였다. 시와 주공은 1991년 9월까지 부지 선정과 관련하여 협의한

2) 이 부분은 2003년 7월 4일 개최된 '군포소각장 반대 · 대안운동 10주년 시민토론회' 자료집의 「군포소각장 반대 · 대안운동 10년의 평가와 향후 과제」를 수정 게재한 것이다.

쓰레기소각장(원 안)의 입지

후 산본동 산166번지를 소각장 건설부지로 결정했다. 그 과정에서, 본래 1차 부지 선정과정에서 유력하게 거론되던 부곡동 소재 대상 부지가 '안양베네스트골프장에서 가시권이고 도시미관을 해친다.' 는 이유로 부적합 판정이 내려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골프장 측의 로비 의혹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1991년 11월 시는 쓰레기소각장 건설계획을 확정하고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하여 1992년 12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공고를 했다. 그러나 당시에는 입주율이 14.7%로 저조한 상태였고 공람장소도 부적합하여서, 소각장 건설계획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입주한 주민이 대다수였다. 그 결과,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주민의견 없음' 으로 보고되었다. 애초 도시건설계획에 소각장 설치계획이 없었고, 분양 홍보과정에도 그러한 사실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던 점은 주민들이 소각장 건설 자체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였고, 주공의 '사기분양' 논란도 거세졌다.

(2) 주민의 적극적 반대운동

쓰레기소각장 건설은 계획이 입안된 지 3년여의 시간이 지나면서 가시화되기 시작하였다. 1993년 5월 소각장 건설계획을 접한 계룡아파트부녀회와 주민들은 부지 인근의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신도시 아파트 전역으로 확대된 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7월 6일 시청 앞 광장에서 첫 궐기대회를 열었다. 대책위원회는 이 집회를 시작으로 1994년 11월까지 총 19차례에 걸쳐 반대집회를 개최했다. 그뿐 아니라 아파트 베란다에 엘로카드를 상징하는 황색깃발 걸기,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등에 청원하기, 주택공사 본사 · 시의회 의장 · 정부청사 항의방문, 주민모금을 통한 공사중지 가처분신청 등의 법적대응처럼 다양하고 적극적인 반대운동을 전개했다.

이러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모든 절차를 강행했다. 1994년 12월 5

일 3,000명의 경찰과 500명의 공무원이 동원된 가운데 착공식이 강행되자 주민들은 경찰의 과잉대응에 항의하며 자녀 등교거부, 야간 냄비시위를 벌였다. 특히 야간 냄비시위는 1995년 6월 지방선거까지 6개월 동안이나 지속되었다. 주민들은 아파트 단지를 에워싸고 있던 경찰의 연행에 맞서 매일 저녁시간에 아파트 베란다에서 냄비를 두드렸고, 경찰병력이 철수한 후에는 8단지입구사거리 일대로 나와 시위를 전개했다.

2년간의 반대운동 과정에서 두 차례나 지도부가 구속 수배되었고 많은 주민이 연행되어 벌금을 물기도 했다. 당시 TV에 방영되던 드라마 '모래시계'를 보면서 주민들은 "우리는 계엄령하에서 살고 있다. 광주민주화운동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반응을 보일 정도였다. 당시 대부분의 언론은 주민들의 저항을 지역이기주의로 폄하했고, 『한겨레신문』 정도만이 주민의 주장을 이해하는 입장의 논조였기에 주민들은 『한겨레신문』을 제외한 다른 신문의 구독과 반입을 사절할 정도였다.

주민들의 쓰레기소각장 건설 반대운동은 수리동, 궁내동, 광정동의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소각장범시민대책위원회를 통해 진행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지역에 거주하는 김수행 교수 등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연명으로 탄원서를 제출하고 대책위원회 공동대표로 참여하면서 힘을 보태었다. 또한 1995년 3월에는 이인영 국립환경연구원 초빙연구원이 산본 신도시는 기온역전층 현상이 발생하는 지역이므로 소각장 가동 시 참사가 우려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 연구결과는 이후 입지의 부적합성 및 안전성 시비의 핵심 쟁점이 되었고, 나중에는 소각장 공사를 중단시키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주민들의 지속적이고 대대적인 반대운동은 1995년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한 여섯 명의 시장후보가 모두 소각장 건설 백지화를 공약으로 내걸게 만들었다. 대책위원회의 김영재 공동대표가 수배중인 상태에서 시장으로 출마하면서 정치적 시비가 붙기도 했고, 이러한 시비는 이후 소각장 반대운동 과정에서 주민 내부의 갈등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소각장 반대운동을 주도하다 수배중이던 방상익 씨를 비롯하여 김영숙 · 김주삼 · 유삼종 · 권순태 씨 등의 간부들이 시의원에 당선되어 의회를 통한 소각장 반대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고, 동대표자회의와 계룡아파트부녀회(윤영숙 회장)를 비롯한 각 단지 아파트부녀회가 주축이 되어 연대회의의 실질적인 활동을 수행하였다.

한편, 소각장 반대운동 과정에서 주민들은 부곡동 781번지가 소각장 후보지로 적합하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의견은 합리적 검토과정을 거치기 전에 개발의 소외로 상대적 박탈감을 지닌 기존 도시권 주민들의 반발을 초래했고, 군포시 내부에 새로운 갈등 유발 요인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3) 군포시의 소각장 건설사업 강행

주민들의 계속된 문제제기와 반대운동에도 불구하고 시 측은 소각장 건설을 위해 주공과 입지선정을 추진했고 관련 정부부처와의 협의를 차례로 진행시켰다. 문민정부 시절이던 1994년 4월에 당시 이회창 총리가 경질되고, 이른바 '신공안 정국' 이 조성되는 과정에서 '민원이 해소되지 않는 한 공사를 강행하지 않는다.' 는 유화적 분위기는 '집단민원에 밀리는 행정은 용납하지 않는다.' 는 강경분위기로 바뀌어 버렸다. 이러한 경색된 분위기는 중앙정치권을 통한 문제 해결 시도를 가로막아 버렸다.

시 측은 일반 주민에게 소각장을 집단 견학하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시의원들과 동대표자회 회장, 언론인, 관련 공무원 등이 2회에 걸쳐 일본의 소각장을 견학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착공식 직후 소각장의 안전성을 홍보하기 위한 벽보를 제작해 시 전역에 부착했고, 각종 홍보물을 제작하여 주민에게 배포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주민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또한 1995년 초부터는 시정소식지인 『군포소식』을 매주 제작하여 수시로 소각장 건설의 필요성과 정당성, 안전성을 홍보하였다.

시 측은 다른 한편으로 주민자치조직인 동대표 회장단과 아파트부녀회 간부들을 설득하는 작업도 지속적으로 전개했는데, 이 과정에서 자치부녀회를 새마을부녀회로 편입시키기 위해 동사무소를 통한 주민 회유작업이 전개되었다. 새마을부녀회와 자치부녀회의 문제는 주민자치의 새로운 해결과제로 대두되기도 했으나 시 측의 지지를 받아 온 새마을부녀회의 우세로 귀착되었다. 이에 맞서 아파트부녀회들은 새마을부녀회 편입을 거부하고 자치부녀회로 남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였고, 일부 아파트단지에서는 반상회가 아닌 주민회의를 자발적으로 개최하는 등 기존 행정체계 편입을 거부하면서 '○○아파트공화국' 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했다.

(4) 주민과 환경단체의 연대활동

한편 주민들은 1993년 7월, 당시 수도권 곳곳에서 진행되던 소각장 반대운동 조직이 연합한 '전국 소각장 설치반대 주민연합회' 에 가입하며 연대활동에 참여하게 되었고, 이로써 군포 지역의 상황과 주민들의 치열한 반대운동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환경단체의 지원 연대활동이 잇따랐다. 1994년 12월 소각장이 강제 착공된 이후 군포시에서는 시민단체의 입지와 활동을 넓혀, 군포시민의모임, 중앙의 경실련 · 환경운동연합 · 녹색연합 · 환경과공해연구회, 안양권의 제 단체가 연대하여 1995년 초 '군포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환경단체 연대회의' (이하 '군포환경연대회의') 를 구성하여서 주민들의 반대운동을 측면 지원하였다.

이와 같은 연대활동은 군포 지역만의 운동이라는 국지성, 지역이기주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또한 당시의 연대 경험은 소각장 건설이 추진되었던 서울과 경기 지역의

주민대책위원회와 환경단체, 중앙의 환경단체 연대조직인 '수도권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연대회의'가 1996년 2월 창립하는 계기도 되었다.

2) 김포매립지 쓰레기 반입중지와 새 부지선정 논란

(1) 성급한 입지 선정에 따른 갈등

1995년 7월에 조원극 초대 민선시장의 임기가 시작되면서 소각장 문제는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당시 조원극 시장은 취임 직후, 산본동 산166번지의 소각장 건설공사를 중단시키면서 신도시와 기존 도시권의 쓰레기를 함께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 자율추진위원회를 통해 새로운 부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소각장 건설을 반대해 온 신도시 주민들은 일순간 승리의 감격을 맛보았다. 반면, 기존 도시권에서는 불안한 분위기도 감돌았다.

그런데 김포매립지에서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군포시쓰레기에 대한 반입중지가 이루어졌다. 당시 환경부가 수도권 신도시의 쓰레기는 소각해서 용량을 줄여 반입하겠다고 실무회의에서 약속한 사실과 황산성 환경부장관과의 협약을 근거로 반입중지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김포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매립지로 사용되는 자신들의 터전을 환경오염으로부터 지키려는 환경권 차원에서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그후 이 반입중지 결정권은 서울과 경기 일원에서 소각장 건설을 강요하는 중요한 압박수단으로 작용하여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자 시에서는 대책 마련에 부심하였고, 8월에 신도시와 기존 도시권의 각 동 대표와 교수 4명으로 구성된 '군포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시민자율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소각장 부지선정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수차례의 회의를 통해 부곡동 722번지로 입지를 선정했다. 이에 대해 부곡동 주민들이 시청으로 몰려와 시장을 감금하는 등 격렬하게 저항하면서 부

방치된 쓰레기더미(좌)와 반입 재개(우)
당시 김포매립지의 군포시쓰레기 반입중지는 군포시 전역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다. 시내 곳곳에 쓰레기가 쌓이고, 중앙공원이 쓰레기로 가득한 쓰레기하치장으로 변할 정도였다.

지선정은 취소되었고 자율추진위원회도 해산했다. 1차 추진위원회가 실패한 것이다.

다시 9월 7일에 시장은 시청 간부를 중심으로 '소각시설 설치추진기획단(단장 이영민 부시장)'을 조직하고 기획단을 앞세워 소각장 건설을 계속 추진하였다. 하지만 부지선정이 지연되자 김포매립지에서는 10월에 2차 반입중지를 결정했다. 부지선정을 낙관하고 있던 시 측은 이러한 난관에 봉착하자 국회의원, 시 · 도의원 등 2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시장직을 걸고 12월 말까지 부지선정을 완료하겠다.' 는 각서를 제출함으로써 반입을 재개할 수 있었다.

한편, 상급 행정기관인 경기도는 군포의 쓰레기 대란에 대해 수수방관으로 일관했다.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3]의 주체이면서도 전혀 개입하지 않았고, 오히려 군포시 사태를 경기도 쓰레기 관리정책을 1시군구 1소각장 정책으로 전환하는 계기로 삼았다.

(2) 산본동 산170번지 부지선정과 주민 반대운동의 발전적 변화

두 차례 쓰레기 반입중지를 겪으면서 두 가지 양상이 나타났다. 기존 도시권 및 자치력이 부족한 일부 아파트에서는 쓰레기더미가 쌓이고, 주민자치가 활발한 단지에서는 쓰레기를 내놓지 않았다. 특히 소각장 반대운동을 치열하게 했던 아파트 단지일수록 주민들의 자율적인 통제에 의해 비교적 깨끗하게 유지되었다. 1995년 3월 군포환경연대회의가 실시한 '쓰레기 성상조사'에서도 소각장 예정지 인근 아파트와 멀리 떨어진 아파트 간에는 쓰레기 발생량에서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국 기초적인 조사를 통해 용량과다임을 지적하였을 뿐 아니라 소각장 반대운동을 열심히 했던 지역에서는 쓰레기문제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는 사회적 학습효과가 확인된 것이었다.

한편 시 측은 신도시와 기존 도시권의 각 동을 대표하는 주민과 전문가, 고위공무원으로 2차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주민들로부터 입지를 공모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취했다. 수차례의 회의를 거쳐 14개 후보지 중 네 곳을 유력후보지로 선정했고, 최종적으로는 신도시와 기존 도시권에서 한 곳씩 두 곳을 압축하여 제시했다. 시장은 다시 의회에 선정을 요청했다가 의회의 조건부 지지통보를 받고서, 1995년 12월 시 간부들의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산본동 산170번지를 부지로 결정하고 12월 30일에 이를 공식 발표했다.

그러나 시의 결정에 대해 신도시 주민들은 즉각 반발했다. 1996년 1월 3일 시청 항의방문을 시작으로, 1월 7일 시청 앞에서 2,000여 명의 주민이 모여 20차 항의집회를 개최하는 등 반발이 거세게 일어났다. 3월에도 반대집회는 계속되었고, 4월 9일에는 신도시 주민 1만여 명이 산본동 산170번지 선정안에 대해 집단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그리고 주민 4,000여 명 명의로 경기도에 행정심판

3)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은 서울 · 경기 · 인천의 3개 광역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하는 특별자치단체이다. 수도권매립지는 각 자치단체가 부담금을 납부하여 조성되었는데, 경기도에서는 기초자치단체의 선택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곳도 있었다.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기존 도시권 주민들은 집단적으로 산170번지 선정안에 찬성의사를 밝혀 두 지역 간 갈등이 심화되기에 이르렀다. 이런 와중에 시장은 군포시의 사례를 지역 이기주의 극복 또는 입지선정 성공사례로 발표하여 주민들의 빈축을 샀고, 시 측은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부지변경 절차를 진행시켜 8월 29일 환경영향평가 초안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당시 주민 500명이 참석해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항의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두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다. 먼저 입지선정위원회의 대표성, 참석한 전문가들의 견해가 지닌 객관성 시비였다. 다른 하나는 건설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동의안에 대한 주민 동의 요구에 대해 시 측이 '대다수 주민들이 암묵적으로 동조했다.' 고 답변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1996년 10월 시민단체와 노동조합, 그리고 일부 시의원 및 주민대표는 소각장대책모임인 '군포시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연대회의' (이하 '시민연대회의')를 재조직하면서 시 측의 산170번지 입지선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시민연대회의에는 주민자치기관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부녀회와 시민단체, 그리고 노동조합까지 참여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특히 노동조합이 지역의 환경문제에 연대한 중요한 사례가 되었다.

시민연대회의는 실의에 빠져 있던 주민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으며 1996년 11월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청회에서 선정부지의 문제점 등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을 파헤쳤다. 이 외에도 쓰레기감량과 재활용을 위한 조례 제 ·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해 갔다. 또한 간부와 부녀회장을 중심으로 1997년 4~5월에는 매주 시장 퇴진을 요구하며 시청을 항의방문하기 시작했고, 다른 한편으로 한강환경관리청을 항의방문하면서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6월과 7월에는 주민 2만여 명의 서명을 받아 한강환경관리청과 환경부 등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3) 소각장 착공과 지방선거

(1) 공사 강행과 주민의 대응

시민연대회의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청회를 준비하며 수리산의 생태계를 조사하였고, 이는 수리산지키기운동의 계기가 되었다. 군포시민신문사는 수리산에 살고 있는 동 · 식물을 소재로 달력을 제작하는 등 수리산 보전의 공감대를 확대해 갔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과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 승인과정에서 한강환경관리청과 건설교통부는 자신들의 보완요구를 철회하면서까지 군포시의 편의를 봐주었다. 결국 이는 한강환경관리청이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불신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중앙행정에 대한 불신과 배신감으로 확대되었다.

시 측의 적극적인 준비로 산본동 산170번지의 소각장 건설공사에 대한 제반 사업승인이 나자, 시장은 1997년 8월 29일에 서둘러 착공식을 진행하려 했다. 주민들은 이에 맞서 8월 24일 시청 앞 광장에서 3,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22번째 공사중지 촉구 궐기대회를 개최하였다. 착공식 당일에는 수리산 장례식을 치르며 저항했고, 이 과정에서 전경과의 물리적 충돌로 주민이 다치고 시청 청소과장과 시장이 고소 · 고발되었다. 그때까지 주로 시 측이 반대운동 중심인물을 고소 · 고발하였던 것과는 달리 이때부터는 시민들이 시장과 시 간부를 고소 · 고발하는 상황으로 바뀐 것이다.

한편, 이 기간에 시민단체들은 '쓰레기학교'를 열어 주민환경교육을 실시하고, 김포매립지를 방문하기도 하였으며, 시민참여방식의 쓰레기관리위원회 구성을 위한 조례 제정도 추진하였다. 또한 1996년부터 요구했던 아파트단지에서 배출하는 음식물찌꺼기 재활용사업에 대한 지원을 시 측에 요청하였다. 그러나 이 요구가 제때 수용되지 못한 채 1년여의 시간이 흐르자 주민들은 시민단체와 함께 자비로 음식물찌꺼기 사료화를 추진하였고, 주민들의 계속적인 요구에 응하여 시에서도 수거용기를 제공하게 되었다. 이 사업은 1998년 3월부터 설악과 덕유아파트부녀회와 군포환경자치시민회 수리살림팀 주도로 세대당 월 1,000원의 수거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본격화된다.

(2) 소각장 문제의 재부각과 6 · 4 지방선거

당시 시 집행부 측에서는 소각장 건설을 늦추지 않은 채 건설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소각장 건설 시민감리단'이라는 조직을 각 동별 주민의 추천을 통해 조직하려고 시도했다. 이는 시민연대회의와 소각장 인근 동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시민연대회의와 시민단체들은 두 차례나 부결된 소각장 건설 시민감리단 문제가 불거진 것을 계기로 1998년 4월부터 다시 시청 항의방문을 시작하

시청에서 진행된 소각장 건설 반대성명 시위(1998년 4월)

였다. 또한 시민연대회의는 수리산지키기 시민걷기대회, 소각장 건설중단 촉구 결의대회를 각 아파트단지를 순회하며 개최하고 거리행진을 하는 등 반대운동을 적극적으로 하였다. 이 무렵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자는 움직임도 일어났다. 군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군포경실련')은 5월 1일 '군포 소각장문제 발전적 모색을 위한 시민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소각장 대신 자원 재활용시설 설치가 바람직하다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당시는 6 · 4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었다. 이에 시민연대회의는 소각장공사를 중단하고 감량 재활용 우선 정책으로 전환할 수 있는 후보를 지지하기로 하는 등, 선거에서 소각장 문제를 다시 쟁점으로 부각시켰다. 현직 시장 외 나머지 3명의 후보가 모두 중단과 재검토를 주장하고 나선 가운데 환경영향평가 재실시, 쓰레기감량과 재활용 강력 추진 및 지원, 시민과 함께 대안을 마련한 후 공사 중단을 공약한 김윤주 후보가 제2대 민선시장에 당선되었다. 그리고 시민연대회의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하던 김영숙 시의원이 재선되고, 소각장 반대 운동의 중심지인 수리동에서 송재영 후보가 시의원에 당선됨으로써 이후 시 측과의 협상을 주도적으로 해 갈 수 있는 의회 내 기반이 마련되었다.

4) 민 · 관 협력과 소각장 준공

(1) 민 · 관 협력의 첫 시도

제2대 민선시장의 임기가 시작되면서 시민연대회의는 시장과 협상하게 되는데, 이 시기는 처음으로 민 · 관 협력이 시작되는 시기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갈등이 교차하는 시기였다. 시민연대회의는 1998년 6월 1일 집행위원회 논의를 거쳐 6 · 4 지방선거에서 김윤주 후보를 지지하기로 결정하고, 아파트 단지를 순회하며 소각장 공사중단 촉구 집회와 시위를 전개하면서 김 후보를 지지하였다. 선거 후 양자 간에는 우호 협력의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시민연대회의는 이러한 분위기에 힘입어 친환경적 폐기물관리조례 개정운동을 다시 시작하여 토론회를 개최하고 의회 내에서 방안을 협의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시장도 감사원에 소각장 건설과 관련한 감사를 요청하는 등 시민연대회의의 활동에 협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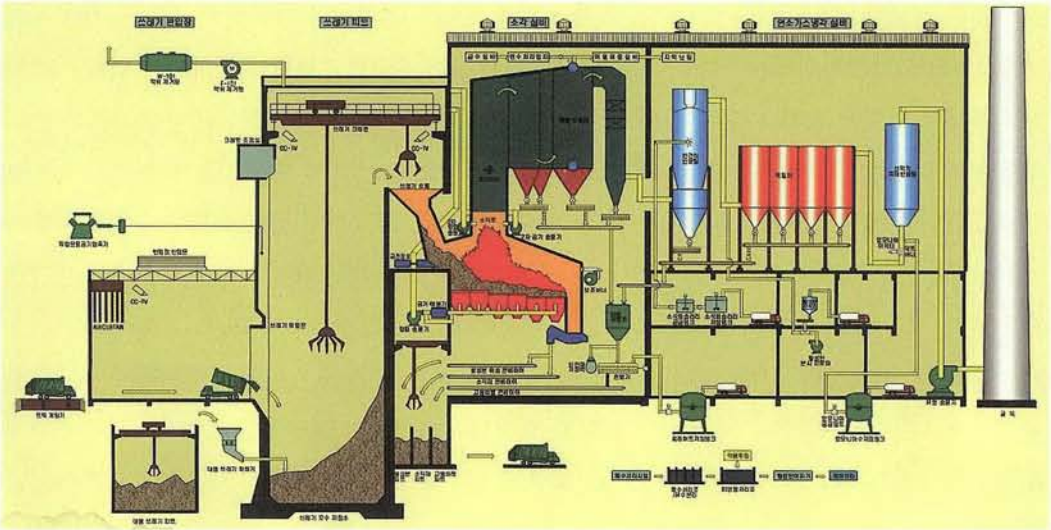
소각장 건설 중단 및 용량 축소와 관련하여 1998년 11월 시민연대회의 대표들과 시장, 시청의 청소과장이 참석한 비공개회의가 금정동 소재 프린스호텔에서 열렸고, 여기서 중요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는 소각용량을 1일 100t 규모로 축소하는 설계변경을 주공 측에 요구하고, 소각장 환경영향조사를 즉시 발주하기로 하는 등 5개 항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합의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서 새로운 불씨로 등장하게 된다.

한편, 물리적인 힘의 한계로 소각장 착공을 막지 못한 후, 시민연대회의에 참여하는 아파트부녀회와 군포환경자치시민회는 1997년 12월부터 음식물쓰레기 사료화를 위한 순회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여기에 참가하는 아파트 단지가 늘면서 민간 차원의 노력은 한계에 봉착하였고, 이에 시 집행부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치를 요구하게 되었다. 시 집행부도 이에 호응하여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을 확대하고 처리시설을 외부에 확보함으로써 이 사업이 전체 가구로 확대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2) 폐기물관리조례 개정과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1996년부터 폐기물관리조례 개정운동을 전개한 시민연대회의는 토론회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하고 시의회를 통해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된다. 2000년 6월 개정된 조례에 근거하여 그해 9월에 시민환경단체 소속 4명과 동별 부녀회장 등이 폐기물관리시민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다. 그러나 이 위원회는 정치적 배려에 의한 위원회 구성방식의 한계, 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와 시 집행부 간의 갈등 등으로 자체 활동을 거의 하지 못하였다. 시 행정의 소극적인 자세와 더불어 시의원이 위원장에 선출됨으로써 주민의 폭넓은 참여와 시민참여형 폐기물관리계획의 실현이라는 애초의 목표는 유명무실화된 채 또 하나의 형식적인 위원회로 전락하는 양상이었다.

한편, 시민연대회의와 시장의 협의로 2000년 11월 '군포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소각장협의체')가 조직되었다. 소각장협의체는 규약을 만들어 정비하고, 시 측과 5개월여에 걸쳐 소각장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협상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2001년 3월 30일 「군포환경관리소 시험가동 관련 협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합의에 따라 협의체가 추천한 2개 업체를 입찰을 거쳐 선정한



군포환경관리소 소각시설 계통도

후, 안전도 성능검사를 시행하여 안전성을 확인하였다. 이렇게 주민의 반대운동에도 불구하고 소각장이 건설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안전성 확보, 친환경적 쓰레기관리방안 마련, 주민피해보상, 수리산 복구와 보전, 시민참여권 확보 등의 요구를 담은 협약을 체결하였고, 그것은 곧 민 · 관 협력의 길을 열어 가기 시작한 것이라 평가된다.

그러나 이 협약에 대해 시장이 이행을 미루거나 회피함으로써 또 다른 불신과 갈등을 낳았다. 당시 시 집행부는 소각장협의체를 시장의 일반적인 자문기구 수준으로 인식하였던 데 비해서 시민들은 소각장협의체가 주민의 대표성을 갖는 감시 및 심의기구임을 주장하였기에 두 입장은 평행선을 그을 수밖에 없었다. 시 측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의 300m 거리제한 조항을 들어 소각장협의체를 구성하지 않아도 되었으나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구성한 것이라는 배려론을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소각장협의체 측에서는 이 기구의 구성은 10년간 계속되어 온 소각장 반대운동 및 대안운동의 성과로 보장되어야 할 주민참여권이라고 주장하였다. 결국 시 측이 협약을 이행하려는 의지가 없거나 소각장협의체가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민 · 관 협력의 길은 성과 없이 끝나게 된다는 점을 깨닫게 해 주었다.

5) 소각장 가동 이후

(1) 본가동 시작과 감시기구의 약화

2001년 6월 소각장 본가동이 시작되면서 상황은 새롭게 바뀌게 되었다. 시 측이 시험가동협약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가동식 행사를 진행하는 등 협약이행 지연과 거부가 이어졌다. 이에 시민연대회의와 소각장협의체는 반대시위를 전개하였다. 특히 주민협의체는 소각장에 반입되는 쓰레기를 통제하기 위한 방안을 준비하여 7월에 쓰레기 성상조사를 실시하고 10월부터 본격적인 반입제재를 시작하였으나 시 측과 시공사인 현대건설의 비협조로 난항에 부딪혔다. 주민협의체는 반입중지 중인 차량을 통제하기 위한 몸싸움을 전개하는 한편, 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강력항의하고, 11월에는 불법강제반입 규탄보고대회를 마친 후 시장실을 항의 방문하여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기도 했다.

이와 같은 소각장협의체의 강력한 반발에 위기감을 느낀 시 측은 임기만료를 이유로 주민감시원 최정옥 씨를 해촉하였다. 이에 최정옥 씨는 1인 시위에 돌입하고, 시청 홈페이지에 주민협의체를 비난하는 익명의 글이 게시되면서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사태가 일어났다. 그리고 주민협의체도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채 분열되고 무력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3

명의 위원은 독일의 소각장 견학이라는 선심성 행사에 참여하기까지 하였다.

소각장 시험가동에 따른 협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본가동협약의 체결도 없이 2002년 6 · 13 지방선거는 소각장 문제에 새로운 국면으로 다가왔다. 재선된 김윤주 시장은 소각장협의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소각장 운영을 강행하였고, 주민협의체는 내부사정으로 힘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채 표류하게 되었다. 그런 가운데서도 계속된 반입규제 및 확대된 배출처 규제방식은 쓰레기 감량효과를 지속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이 시기에는 시민연대회의의 활동이 점차 위축되면서 그 중심이 소각장협의체로 이전하지만, 6 · 13 지방선거 이후 그마저도 부진해지고 말았다.

(2) 성과와 남은 과제들

환경부는 애초 산본 신도시의 계획인구 17만 명을 기준으로 200t의 소각로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인구 28만여 명인 2008년 현재 하루 100t 정도의 반입량에 그쳐 한 달 중 거의 절반을 가동중지하는 실정이다. 단속운전의 반복은 예산낭비, 기계설비 조기노후화, 오염물질 증가 등의 문제를 누적시킨다. 이처럼 환경부의 급격한 소각위주정책이 빚어 낸 용량과다라는 실패상은 결과적으로 시민들의 주장이 옳았음을 알려 주며, 군포시뿐만 아니라 소각장 반대운동이 있었던 모든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해 쓰레기 소각 대신 감량 · 재활용 확대, 음식물 분리수거

완공 직후의 군포환경관리소

정착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 특히 분리배출과 재활용 확대는 시 측과 협조도 잘 이루어졌으니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한편, 2002년 10월 말 1기 소각장협의체 활동이 종료되면서 시장의 직무유기에 의해 4개월의 공백이 있었다. 그리고 광명시나 성남시 등과 달리 소각장 주변영향지역의 확대고시를 하지 않은 채, 소각장 주변경계지역 주민대표를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 폐촉법의 취지를 벗어나 시장 재량으로 위원을 선정, 위촉하였다. 이는 결국 소각장에 대한 주민의 관심이 약화되면서 시 측의 협약서 무시와 약속 불이행, 그리고 일부 소각장협의체 위원의 회유로 귀결되고 말았다. 2003년 7월에 '군포소각장 반대 · 대안운동 10주년 시민토론회'를 개최하는 등의 활동으로 소각장 반대운동은 일단락되었다. 이후 환경 관련 시민단체의 쓰레기 관련 활동이 지속되었고, 2003년 3월에는 경기도에서 소각장과 관련하여 활동 중인 시민단체, 주민대책기구, 소각장협의체가 연대하는 경기소각장 시민연대가 창립되어 2008년 말 현재까지 연대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소각장을 둘러싼 10년의 과정은 시 승격 이후의 군포시 역사를 압축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막강한 행정력과 공권력이 동원되었다. 시민들은 각종 언론으로부터 님비(지역이기주의)의 표본처럼 매도당하였고, 이에 지역 언론의 필요성을 느낀 인사들이 중심이 되어 1995년 5월 시민주주제 방식의 『군포시민신문』이 창간되었다. 이 신문은 비슷한 시기에 창간된 『군포문화신문』(현 『군포신문』)과 함께 주민의 편에서 소각장 반대운동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였을 뿐 아니라 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통해 주민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소각장 건설 과정에서 시민들은 환경권과 자치권을 확보하기 위해 단결하였다. 이는 풀뿌리민주주의의 성장과 행정의 변화, 그리고 시민과 행정의 상호이해를 이루어 가는 과정이었다.

3. 시민운동의 성장과 흐름

소각장 건설 반대운동 과정에서 군포시의 시민운동은 질적 성장뿐만 아니라 양적으로도 크게 성장하였다. 군포시에서는 1992년 11월 창립한 군포시민의모임을 필두로, 1990년대 중후반에 들어서 다양한 시민단체의 창립이 이어졌다. 당시 설립된 군포경실련(1997년 9월), 군포환경자치시민회(1997년 11월), 청소년을위한군포내일여성센터(현 군포탁틴내일, 1999년 1월), 군포여성민우회(1999년 4월), 군포YMCA(2000년 6월) 등은 현재 대표적인 시민운동 단체로 자리 잡았다. 이 외에도 여성 · 복지 · 청소년 · 교통 · 다문화 등 각 분야에서 적지 않은 사회단체가 창립되어 과거보다 더욱

더 전문화 · 다양화되는 경향이다.

시민운동의 질적 · 양적 성장과 그에 따른 다양화 · 전문화 외에도 2000년대 들어서 시민운동은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시민단체 활동은 크게 사회복지서비스 활동과 시민권리주창형으로 구분하여 운동의 특성에 따라 살펴볼 수 있다.[4] 여기서는 1990년대의 성과를 바탕으로, 2000년대에 나타나고 있는 시민운동의 양상들을 후자의 사례를 중심으로, 몇 가지 주요한 흐름에 한정하여 정리해 보려 한다.

1) 시민단체의 연대활동

시민단체들은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활동을 펼치는 한편,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연대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군포 지역에서 초기 시민단체의 연대활동은 앞서 살펴본 쓰레기소각장 건설 반대운동이 중요 계기였다. 특히 1998년 6 · 4 지방선거를 앞두고 군포시민의모임, 군포경실련, 군포환경자치시민회, 환경복지군포시민기구 등 4개 시민단체가 '6 · 4연대회의'를 조직하여 6월 지방선거에서 정책공청회와 시장후보 초청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이를 시작으로 지역 내 각종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연대활동이 전개되었다.

이러한 활동은 2000년 봄 '군포총선시민연대' 활동을 거치면서 2000년 9월 8일에 군포경실련, 군포시민의모임, 군포시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연대회의, 군포여성민우회, 군포환경자치시민회, 군포YMCA,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전교조군포지회, 청소년을위한군포내일여성센터, 환경복지군포시민기구 등 10개 단체가 참여한 '군포시민단체협의회'의 창립으로 이어졌다. 이 협의회는 2008년 말 현재 8개 단체가 참여한 연대기구로 정착하였고, 각종 현안에 공동대응하며 시정과 의정 감시활동, 사회복지 제공 등 시민사회 공동의 목표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고 있으며, 6개월 단위로 간사단체 역할을 돌아가며 맡아서 안정적으로 활동 중이다.

한편, 최근에는 시설관리공단 설치와 관련하여 시민단체의 연대활동이 있었다. 이에 대해 군포내일여성센터 등 시민단체들은 "청소년 · 복지 · 문화 등 전문적이지 않은 사회적 기능을 요구받는 분야의 기관과 시설까지 운영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쓰레기봉투와 주차장만으로 예산만 낭비하는 등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공청회 등의 여론 수렴절차나 공론화 과정 없이 진행되자 시민단체들은 2007년부터 시설관리공단 설치반대 운동을 전개하고, 2008년 3월부터는 서명운동과 관리공단조례 원천무효를 촉구하는 집회 등을 개최하였지만, 관련 조례 제정과 공단 설립을 막지

4) 사회복지서비스 활동으로는 군포시민의모임의 당동 청소년문화의집 위탁 운영, 군포내일여성센터의 광정동 청소년문화의집 위탁 운영, 군포YMCA의 가야사회복지관 위탁 운영처럼 관내 청소년시설과 복지기관의 위탁 운영을 사례로 들 수 있다. 시민단체의 기관위탁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전문성과 헌신성 등 수탁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나 시민단체의 활동이 행정에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없지 않다.

는 못했다. 또한 2008년 3월에는 시와 의회의 해외연수가 고비용 외유성 연수임을 지적하고 연수비 반환을 촉구하는 활동을 벌였으며, 이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3명의 공무원에 대해 일부 비용의 반환처분이 내려졌다.

2008년 5월에는 『군포시민신문』의 보도로 시 집행부의 시민단체 폄하 및 회유 구상과 관련된 논란이 촉발되었다.[5] 이에 대해 시민단체협의회는 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며 강력히 항의했다. 이 사건은 시 측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사과문을 발표함으로써 일단락되었으나[6]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 간의 간격을 보여 주는 상징적 사례가 되었다. 또한 이 무렵 시의회 의장의 땅투기 의혹에 대한 지역신문 보도를 계기로 의혹 규명과 사퇴요구 등의 활동이 이어졌다.[7]

이 외에 시민단체들은 시정 · 의정 참여를 위한 군포예산지킴이 시민연대를 결성하여 통장직선제 폐지 반대, 2009년도 예산 중 예산 삭감과 복지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등의 활동도 진행하였다. 이처럼 시정과 의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은 시민단체 본래의 역할임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에 긴장감을 갖게 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2) 시민단체의 지역정치 참여

시민단체들은 지방자치 선거와 관련하여 1998년 이후 선거시기마다 연대기구를 결성하여 후보초청 토론회를 통해 정책을 비교평가하는 등 유권자로서의 정치참여 활동을 계속해 왔다. 시장 후보의 경우 시민단체 차원에서 직접 지지한 경우는 없었고, 시의원 후보의 경우에는 소속 시민단체가 지지활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여성단체 차원에서는 안양권에서의 여성정치 참여를 위한 후보 발굴과 지지활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구체적으로 2002년 지방선거에서는 군포시민의모임, 군포경실련, 전교조군포의왕지부, 안양군포내일여성센터, 군포여성민우회, 군포YMCA 등 6개 시민단체가 '올바른 선택을 위한 6 · 13지방선거 군포시민개혁연대'를 발족했다. 이 연대기구는 발족선언문에서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없는

5) 2008년 5월 12일 『군포시민신문』의 제459호에는 「반대하는 시민단체에 예산지원 계획」이라는 기사가 실렸다. 당시 『군포시민신문』이 입수한 시 내부문건 「시민단체 활성화 운영계획」에는 "군포시 시민단체들이 압력단체로 전락했고, 반대를 위한 반대논리를 앞세워 압력행사는 물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내용과 추경예산을 통해 시민단체에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시 방침이 실려 있다.

6) 2008년 6월 12일 시 측은 "그간 불편했던 관계에서 벗어나 시민단체의 설립목적과 개별 특성에 부합한 사업을 지원해 각 부분별로 개발된 정책을 시정에 반영한다는 극히 순수한 취지에서 시작했으나 진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는 결코 시민단체를 폄하하거나 예산지원을 통한 회유가 아니란 점을 말씀드리며 적절하지 못한 표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군포시민단체협의회에 보냈다. 이에 군포시민단체협의회는 내부 회의를 통해 이 문제를 일단락짓기로 결정하였다.

7) 이 문제는 지방의회 의원이 사전에 인지한 도시계획 관련 개발 정보를 통해 토지를 매입하고 시세 차익을 올렸다는 점에 비판이 집중되었는데, 당시 군포시민단체협의회는 2008년 5월 23일 성명서에서 "이는 공직자인 시의원으로서 사전개발정보를 알고 부동산 투기를 한 것이며, 누구보다 도덕적이어야 할 시의회 의장이 행한 부도덕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는 있을 수 없으며, 지방선거와 지방정치가 탈자치화 · 탈시민화되는 모습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기에 시민단체들의 힘을 모아 연대를 발족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먼저, 지방자치 활성화와 유권자의 선거참여 장벽해소를 위해 「지방자치법」 및 「선거법」 개정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유권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의 언론 및 방송과 공동으로 6월 초에 시장후보 초청토론회를 개최하였다.[8] 2004년에는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 지지운동을 하지 않는 시민으로 구성된 '50인 유권자 평가위원회'에서 정당 및 후보자 평가작업을 진행하여 4월 10일 기자회견으로 결과를 발표하였다. 또한 군포시민포럼과 공동으로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통해 각 정당 및 후보의 정책과 지역의 주요 사안 및 현안과 관련한 평가를 가능하게 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2005년 7월 풀뿌리민주주의 실현과 생활정치운동 전개를 목적으로 풀뿌리정치연대가 창립하였다. 이 연대기구는 창립선언문에서 "1993년 7월 6일 정부와 군포시 집행부 측의 일방적인 소각장 건설에 맞선 소각장 반대 첫 시위로 시작된 소각장 반대 · 대안운동을 군포의 자랑스러운 시민운동으로 계승하려고 한다."고 밝히며 정치NGO를 표방하였다. 창립 준비과정 중인 2004년 12월부터 매월 열린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지역에서의 생활정치와 관련된 주제를 다양하게 다뤘다. 자체적으로는 학습회와 책읽기모임을 진행하면서 시민정치운동과 관련한 심화과정을 거치기도 했다. 사무실을 마련하여 군포시민단체협의회 회원으로 가입하고 생협네트워크와도 생활정치와 관련한 협의를 진행하는 등 지역의 시민단체 및 시민사회 영역에서의 연계활동을 진행하였다. 2006년에는 지방선거와 관련한 직 · 간접적인 선거참여를 위한 후보기준 만들기, 정치세력간의 연대 모색, 시민의 도시구상 등 비전과 정책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하면서 정치 협약을 맺은 시의원 후보를 출마[9]시키기도 하였지만 당선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선거 후 의정참여단 모니터교육 참가자를 중심으로 의정참여단 활동을 진행하였고, 미디어강좌를 개최하여 참가자를 중심으로 미디어운동을 시도하기도 했지만 활동이 중단됨으로써 한계를 드러냈다.

군포시민단체협의회도 주요 사안이 있을 때마다 연대하며 지역정치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특히 2005년 11월에는 군포시민포럼과 공동으로 '군포지역 지방자치 10년 평가를 위한 부문 토론회'를 열고 복지, 여성 등 13개 분야의 현황과 현안을 다각적으로 분석하며 열띤 토론을 펼쳤다. 첫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앞둔 시점인 2006년 4월에는 협의회 차원에서 의정비 심의 토론회를 개최하여 주민대표성 확보와 공정한 심의를 위한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당시는 5 · 31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었기에 매니페스토 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정하고 공약을 개발하여 이를 시장후보들에게 요구함으로써 정책 선거의 가능성을 보여 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당시 선거는 정당공천제의 전면적 실시와 기존정당 중심의 선거구제로 인한 중앙정당의 지역정치 독점 등의 문제점

8) 당시 토론회 패널의 공정성 시비와 광정동 시의원 후보 조정문제로 시민단체 간에 긴장이 조성되기도 하였다.

9) 2006년 4월 지방선거에서 풀뿌리정치연대는 독자적으로 산본1동에서 여성후보를 출마시키면서 선거자금을 모으고 자원봉사로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방식을 진행하였다.

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한편 2007년 12월 설립된 참시민희망연대는 노사모와 개혁당 활동을 했던 회원을 주축으로 결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단체는 4 · 19혁명, 광주민주화운동, 6월항쟁 등 민주개혁정신을 발전시키고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민주시민 생활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누구나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고자 설립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2008년 5월에는 군포광우병대책위와 촛불집회 개최 등에 적극 참여했으며, 정치인 초청 강연회 개최 등의 활동을 해 오고 있다.

3) 생협의 생활공동체운동

2000년대 들어서 정치적인 문제에 대한 관심을 벗어나 일상생활 속의 문제들이 시민운동의 주요 경향으로 자리 잡고 있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계기로 광우병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및 급식네트워크를 통한 친환경 급식운동이 그러한 예에 속한다. 군포 지역에서도 관련 시민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고, 그 중심에는 군포생협네트워크가 있었다.

군포생협네트워크는 군포시에서 활동 중인 4개의 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 연대체다. 생협은 생활공동체운동의 대표적인 예에 속하는데, 이 네트워크에는 군포환경자치시민회의 군포생협, 여성민우회생협 군포지부, 군포YMCA생협, 군포한살림이 참여하고 있다. 여기에는 시민단체들의 연대 경험과 같은 지역에서 생협 활동을 한다는 동질성이 작용하여 연대활동을 지속하게 만들고 있으며, 이는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특징으로 꼽힌다.

군포생협네트워크의 결성은 2003년 당시 물품 공급에 어려움을 겪던 군포YMCA생협이 생협연대의 물류이용을 추진하였고, 이에 대한 군포생협의 문제 제기가 발단이 되었다. 그 과정에서 지역에 기반을 둔 4개의 생협은 서로 대화가 부족했음을 인식하여 연대활동을 모색하였고, 2004년 4월에 함께 모여 학습모임을 시작하고 논의과정을 거쳐 네트워크를 결성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월 1회 생협 · 환경 · 생명 및 공동체운동과 관련된 내용을 공부하고 서로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각 단체의 행사에 적극 협조하고 공동으로 교육 및 행사를 주최하며 연대를 통해 지역공동체를 만들기로 합의하였다.

공동학습은 생협 활동의 사상적 · 이론적 기초를 공유하는 장이 되고, 서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면서 교류의 확대로 이어졌다. 2004년 결성 초기에는 월별 학습계획을 세워서 돌아가며 발제하고 토론하는 방식에 머물렀다. 하반기부터는 공동육아를 위한 논의를 시작하고, 인근 농촌지역과의 교류모색을 위한 친환경 쌀 생산지 방문, 중심상업지역에서의 공동바자회 개최 등의 활동을 하였다. 그리고 11월에는 '생협과 지역공동체'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인근 지역의 생협

무상급식 예산 반영 촉구를 위한 경기도민 서명전[10]

을 초대하였다. 이 토론회에서는 몇 가지 취지를 정리하였는데, 첫째, 경기도(수도권)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생협이 한자리에 모여 활동경험을 공유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둘째, 토론회와 만남을 통해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지역공동체(협동적 지역사회) 만들기를 위한 생협의 역할과 활동방안을 모색해 본다. 셋째, 그룹별 또는 지역별로 나뉘고 개별화된 여러 생협이 지역 내 연대 및 지역 간(광역) 큰 틀의 교류와 연대를 모색하는 자리가 되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군포생협네트워크는 2005년에도 매월 정기적인 대표자회의와 학습을 계속하였다. 3월에는 학교급식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자체 내에 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모색하였다. 4월에는 제1회 생협학교를 운영하며 조합원과 활동가를 위한 공동교육을 실시하였다. 5월에는 장일순 선생 11주기에 맞춰 생협학교 졸업여행을 겸해 원주에서 원주생협협의회와 교류회를 가졌다. 10월에는 '생협은 군포의 미래입니다' 를 주제로 한 제1회 생협주간에 관내 쌀 생산지와 교류하고, '경제공동체로서의 생협과 워커즈콜렉티브' 를 주제로 제2회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당시 어울마당과 벼룩시장을 공동 개최하면서 결속을 강화하였는데, 이때부터 홍보용 리플릿을 공동 제작하여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12월에는 1년 평가와 2006년도 구상을 위한 워크숍과 송년회를 개최하면서 소비에서 생활로 사업과 활동영역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2006년에도 학습을 겸한 정기회를 지속하며, 1월부터 '워커즈콜렉티브 연구회' 를 결성하여 월 1회 정기 학습회를 진행하였다. 3월에 개최된 제2회 생협학교에서는 한 달간 이사 공동교육을 실시하였고, 3월 말에는 오사카의 알파쿠프(생협) 전무를 초청하여 알파쿠프 활동에 관한 강의를 듣

10) 아이쿱 군포생협(http://www.ecolamily.net/bbs/gpcoop/html/default.php).

고 교류하였다. 5월에는 안성(의료생협과 문화예술인)으로 생협학교 졸업여행을 가서 의료생협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또한 5 · 31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두 곳에서 시의원후보 초청토론회를 개최하였는데, 이 일을 계기로 군포생협네트워크는 의정참여활동을 하기로 결의하고 군포풀뿌리정치연대가 주관하는 군포시의정참여단 활동에 적극 나섰다. 당시 군포풀뿌리정치연대는 9월 한 달 간 의정참여단 구성을 위한 모니터 교육을 실시하여 교육에 참여한 부녀회 임원과 생협 임원, 풀뿌리정치연대 회원들과 함께 10월 10일에 '군포시의정참여단' 을 발족하였다. 의정참여단은 의정 및 시정모니터와 더불어 지역 의원에 대한 모니터 활동도 시작하였다.

2007년과 2008년에도 군포생협네트워크의 활동은 계속되었다. 2007년 8월에는 일본 지바현의 생활클럽 생협과 시민단체 등을 방문하여 연수와 국제교류행사를 가졌다. 2008년에는 생협의 철학이나 활동과 밀접히 관련된 광우병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 적극 참여하였다. 그리고 급식네트워크를 통해 친환경 급식운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였다.

4) 시민운동에서 여성의 역할 증대

군포시를 포함하여 신도시가 건설된 수도권의 도시 지역은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베드타운적 성격이 있어, 상대적으로 남성들은 직장에 출근하고 여성들은 육아와 가사를 담당하는 경향이 일반화되어 있다. 그래서 지역의 시민운동에서 여성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그 활동도 활성화되어 있다. 소각장 반대운동의 경우도 아파트부녀회를 중심으로 대중적인 활동이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등장한 리더들은 시민사회단체의 임원이 되어 지금도 많은 활동을 펼치고 있다. 앞서 살펴본 시민운동의 사례들에서도 여성의 참여와 역할이 매우 중요하였고, 행정의 지원을 받는 관변단체 내에서도 새마을부녀회를 비롯한 여성단체의 활약이 두드러진다.

여성운동은 여성단체의 출현으로 본격화되었는데, 관내에서는 1999년 1월 청소년을위한내일여성센터(현 군포탁틴내일)와 4월 군포여성민우회의 창립으로 본격화되었다. 특히 군포여성민우회는 여성인권의 신장과 여성의식 향상을 도모하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활동을 지향한다. 초기부터 성폭력상담소를 개설하여 성폭력 예방교육과 상담활동, 성매매 방지 토론회 등을 진행하며 성평등이 실현되는 사회를 위한 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이들 여성운동 단체들은 여성분야 예산분석 등의 의정지킴이 활동을 전개하며 지역여성들의 구심점 역할을 하며, 각종 사안에서 다른 단체들과 연대하고 있다.

한편, 지역 내 여성활동가들이 중심이 되어 군포여성포럼이 조직되었다. 이 포럼은 한동안 정기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그러나 포럼이 지닌 성격상, 장기간 지속되지는

성폭력예방 학교교육[11]

못하였는데, 이는 군포시민포럼이나 대부분의 다른 포럼들도 마찬가지였다.

5) 시민운동의 대중화

2000년대 들어 시민운동의 경향 중 하나는 소수의 활동가가 아니라 일반 시민의 참여가 활성화되었다는 점이다. 군포 지역에서도 2003년 6월 군포시에 거주하거나 직장을 둔 사람을 중심으로 군포시민포럼이 창립되었다. 군포시민단체협의회가 시민단체의 연대체인 데 비해 이 포럼은 시민단체 활동가뿐만 아니라 취지에 공감하는 다양한 시민들을 회원으로 하였고, 나중에는 시의회 의원에게도 문호를 개방했다.

군포시민포럼은 다양한 사안에 관심을 두면서 매월 1회 정기 토론회를 통해 초기에는 회원들의 학습에 비중을 두었지만, 시간이 경과할수록 지역현안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전환되었다. 이에 2004년 4월에는 국회의원 후보 초청 토론회, 2005년 1월에는 시장 초청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이 포럼은 지역현안을 공론화하고 대중화하는 장으로 역할을 하다가 2007년 이후 활동을 중단했다.

한편, 인터넷 보급의 확대와 일상적 사용으로 시민운동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였다. 젊은 세대를 주축으로 현실적인 생활상의 요구를 반영하고자 하는 온라인 카페가 결성되어 상당한 수준

11) 군포여성민우회(http://gunpo.womenlink.or.kr).

의 대중적 참여를 유도하게 된다. 이러한 사이버공간에서의 시민운동은 주부 중심의 시민단체 활동과는 달리, 직장남성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군포 지역의 경우, '웰빙군포 · 산본을사랑하는모임' (이하 '산사모')이 대표적인 예이다. 산사모는 초기에는 '웰빙산본을사랑하는모임' 으로 출발했다.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신도시 주민이 중심이 되어 활동하였고, '아파트 값 올리기에 나선다' 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 이후 점차 생활환경 개선 등 그 활동을 공적인 영역으로 확대해 가고 있다. 대표적으로 고압선 지중화 사업을 위한 온라인 서명과 여론화 작업을 통해 영향력을 보여 주었는데, 그 과정에서 온라인 회원 3만 명 돌파라는 대중적 확산을 실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2008년 이른바 촛불 정국을 맞으면서 카페 내부의 민주적 절차에 대한 회원 간의 이견이 커지면서 제명과 탈퇴가 이어졌고, 결국 일부 그룹이 민주적인 소통을 주장하며 '군포1번지' 로 분립하였다. 군포1번지는 깨어 있는 시민들의 소통공간임을 표방하며, 온 · 오프라인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4. 도시개발 관련 사안별 공동대책 활동

앞서 언급한 시민운동의 흐름과 함께 지속적으로 도시개발이 진행되어 온 군포시의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흐름이 하나 있다. 그것은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된 시민운동 진영 및 해당 개발지역 주민들의 공동대책 활동이다. 군포시의 시민단체와 주민들은 소각장 반대운동 시기 연대활동의 전통과 경험을 바탕으로 각종 지역 개발 및 환경파괴 우려가 있는 현안에 대한 공동대응 기구를 구성해 활동해 왔다. 최근의 대표적인 현안으로는 초막골 생태공원 조성, 부곡복합화물터미널 확장 반대 활동, 수리산 관통 고속도로 대책활동을 들 수 있다.

1) 초막골 생태공원화 추진

2003년 3월 군포시는 산본동 소재 초막골에 공원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주민설명회를 통해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하면서 시설 설치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시민운동 진영에서는 내부 논의를 거쳐 7월에 생태공원화를 주장하며 10여 개 단체가 연대하는 '초막골 보전대책위원회' 를 결성하였다. 그리고 출범 선언문을 통해 "초막골과 주변 생명체의 생존 및 생

활터전에 위해가 될 정도의 시설도입 및 환경변화가 발생한다면 수리산의 마지막 생명보루가 사라지게 될 것"이고, "시설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통한 자연 자정 및 감당능력에 대한 객관적 평가, 시민요구 및 의견의 객관적 분석, 초막골의 미래에 대한 성숙한 사회적 합의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초막골보전대책위원회는 습지 및 하천의 보전과 군포시가 계획하는 골프연습장 등의 스포츠시설 건설계획 철회를 요구하며 활동을 시작하였다. 또한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입장을 정리하면서 주민 설명회와 거리 서명 등을 통해 생태공원화를 요구하는 여론을 형성해 갔다. 이 과정에서 수리동의 일부 주민들이 골프연습장 등 편의시설 설치를 기대하면서 대책위원회의 활동과 괴리되고 긴장이 조성되기도 하였다.

결국 시민 서명을 기반으로 초막골보전대책위원회는 골프연습장과 스포츠센터 등 체육위락시설 설치계획 변경을 시 측에 요구하였고, 시에서도 그에 응하여 시설 위주의 계획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수리산자연학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생태교육을 시행하고, 수리산의 생태조사 자료를 축적하여 구체적인 근거를 통해 대책활동을 이끌었다. 향후 부지 매입이 마무리되고 공원이 조성되면 초막골 일대는 도시공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위해 새로운 계획 수립과정에서 시민 참여의 보장과 합의 가능한 방안을 찾는 과제가 남아 있다.

2) 부곡복합화물터미널 확장반대 활동

2002년부터 건설교통부는 수도권의 복합물류단지 역할을 하고 있는 군포복합화물터미널의 대규모 확장을 본격 추진하였다. 이에 군포경실련을 비롯한 시민단체와 주민들은 '군포복합화물터미널 확장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2003년 10월 시의회에서 공개토론회 개최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반대 활동을 시작하였다.

당시 대책위원회는 출범의 의미와 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의미를 부여하였다. 첫째, 반민주적 · 권위주의적 행정에 대한 시민 주체의 저항운동이요, 자주적 시민운동이다. 둘째, 주민자치운동이며, 풀뿌리민주주의의 토대를 구축하는 운동이다. 셋째, 환경과 생태문제에 대한 중요성과 절실성을 시민 대중이 체득하고 실현하는 선진적 미래지향적 운동이다. 넷째, 시민단체 · 사회단체, 각 정치권이 전 시민적 권리와 요구를 위해 통일 단결하는 중요한 계기로 군포 지역의 대중적 주민운동을 질적으로 성숙시키는 계기이다.

군포복합화물터미널 확장은 사업자가 민간회사라는 점에서 정부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과는 다른 면이 있었다. 그럼에도 시민단체와 주민들이 군포복합화물터미널 확장에 반대한 이유는 개발

군포복합화물터미널

제한구역 훼손에 따른 녹지공간 축소, 화물차량 등 교통량 증가, 대기오염 유발 등으로 인해 시민의 안전과 쾌적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이었다. 또한 이 사업이 지역경제와 고용을 비롯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하지 못하는 점도 지적되었는데, 이러한 지적에 따라 복합화물터미널 측은 장학금을 출연하고 옥상녹화를 하는 등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대책위원회는 복합화물터미널 출입 차량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교통량을 분석하여 객관적 근거로 제시하였고, 중앙정부의 사업 승인에 맞서 서명운동과 청원운동을 통해 국회에서의 예산 삭감을 유도했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은 과천시 소재 정부종합청사까지 자전거 시위 등을 하였고, 대책위원회는 시민 22만여 명의 서명을 받아 건설교통부에 반대의견을 제출하는 등의 활동을 펼쳤다. 이에 시장과 지역 국회의원이 재검토를 요구하겠다는 자세를 보임으로써 일정 정도 민 · 관협력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2005년 6월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약간 축소된 규모로 사업 추진을 결정하였다. 이에 대책위원회도 산본 중심상가에서 연속 단식농성에 돌입하는 등 반대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으나, 복합화물터미널 확장 반대활동은 2006년 12월에 확장범위를 축소하는 제한적 성과를 거두는 것으로 일단락되었다. 향후 사업 시행과정에서 어떠한 논란과 문제가 다시 불거질지는 미지수로 남아 있다.

3) 수리산 관통 고속도로 대책활동

2002년부터 고려개발을 중심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민자 사업 방식으로 수도권서부고속도로 건설이 추진되었다. 그중 수원~광명 구간 고속도로가 수리산을 관통할 계획임이 알려지면서 관내 시민단체들은 2003년 7월 수리산을 터널로 관통하는 고속도로 건설을 반대하며 범시민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활동을 시작하였다. 대책위원회에는 각계각층이 참여하여 주민서명과 건설교통부 항의방문, 토론회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고, 2007년 5월 21일에 건설사업단과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합의서에서 양측은 「환경 · 교통 ·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및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수도권서부고속도로 군포~의왕 구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조사 및 보고서 작성을 공동 수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시행과정을 담보할 2차 합의서 체결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중단되고 말았다.

한편, 2007년 8월에는 '수원~광명 간 고속도로 수리산 관통반대 군포범시민대책위원회' 가 결성되어 기존의 고속도로 건설반대 입장과 달리 수리산 관통반대 및 우회도로 건설을 주장하였다. 사업단 측은 군포시와 의왕시에서 주민설명회를 강행하려다가 대책위원회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중단하였고, 이후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2008년 9월 4일 두 대책위원회는 '수리산 관통 서부권(수원~광명 간) 고속도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로 통합 출범하였다. 공동대책위원회는 12월 중순부터 사업단 측과 협상을 통해 회사 측의 비용 부담으로 노선 검증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여 우월한 노선을 선택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합의서를 12월 17일에 사업단 측과 체결하고, 곧이어 설명회 성격의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기존 대책위원회에 참여했던 시민단체들이 견해 차이를 이유로 활동을 중단하고, 그후 우회노선을 요구하는 범대책위원회 중심으로 활동하게 되는 등 분열적 현상도 나타났다.

현재 수도권서부고속도로에서 수리산을 관통하는 수원~광명 구간 고속도로 대책활동은 수리산 자연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터널과 도로 건설에 대한 대책과 보완책 등의 대안 마련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활동은 사안의 특성상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5. 군포 지역 시민운동의 의의

군포 지역의 시민운동은 초기에는 안양권의 시민운동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시작되었다. 특히 1987년 6월 민주화 운동기와 7~9월의 노동자 대투쟁기를 거치는 시기에는 안양권 사회운동에 집중되었다. 그러나 1989년 군포시가 출범하고 산본 신도시 건설로 인구가 급증한 1990년대에 들어서는 독자적인 흐름으로 분화하였다. 구체적으로 1992년 11월에 창립된 군포시민의모임을 시작으로 소각장 반대 · 대안운동을 위한 주민조직들, 그리고 1990년대 중반부터 군포경실련, 군포환경자치시민회, 청소년을위한군포내일여성센터(현 군포탁틴내일), 군포여성민우회, 군포YMCA 등이 순차적으로 설립되었다. 최근에도 이주노동자와 다문화가정을 지원하는 '아시아의창' 이 설립되는 등 많은 시민단체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군포시민단체협의회와 같은 시민단체 연대기구의 활동도 활발하다. 이러한 시민단체의 활동에는 주민조직, 민주노동당 등 진보정당 등도 적극 연대하고 있다.

군포 지역의 시민운동은 쓰레기소각장 건설을 계기로 성장하였다. 소각장 건설 반대운동은 자칫하면 지역이기주의로 귀결될 수 있었지만, 오히려 시민들은 이를 시민운동의 태동과 발전의 기회로 삼아 지역신문을 만들고 시민단체를 창립하는 운동으로 발전시켰다. 그리고 이 운동은 소각장 반대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스스로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대안적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그 과정에서 지역 내에만 머무르지 않고 동일한 사안으로 갈등하고 있는 다른 지역의 단체들과 연대한 수도권쓰레기연대회의가 결성되었는데, 이는 환경운동과 주민자치운동의 지평을 확대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12]

또한 소각장 문제를 둘러싼 시민운동의 전개 과정에서 지역신문의 역할은 매우 중요했다. 1995년 5월 시민주주제 방식의 『군포시민신문』이 창간되고, 그보다 한 달 전에 『군포문화신문』(현 『군포신문』)이 창간되었다. 이들 지역신문은 1990년대 초반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비수도권에서 발행되어 온 풀뿌리 지역주간신문과 유사한 형태로 발간되면서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지역신문은 주민의 편에서 소각장 반대운동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통해 주민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고 평가된다.

시민단체의 대표적 연대기구인 군포시민단체협의회 활동의 경우, 결성 초기부터 우호적인 친목을 바탕으로 협력적인 풍토가 조성되면서 결성 이후 전 기간 동안 안정적인 연대활동을 수행해 온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지속적인 연대활동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시민의 정치참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 실시 초기부터 시장후보 초청 토론회, 시의원 후보 추

12) 하승우, 2002, 「일상적인 삶의 정치화와 소통공간의 활성화」, 『풀뿌리는 느리게 질주한다』, 갈무리, 73쪽.

천, 시민정치NGO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졌으나 풀뿌리정치연대의 경험에서 보듯이 지속성을 담보하지 못하였다. 반면에 '노사모' 같은 정치적 경향을 가진 모임은 활발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정치적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의 형태를 띠면서 활동하고 있다. 이제 지방자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시민참여의 확대와 지역정치의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앞두고 있다.

한편, 사이버상의 시민활동의 출현은 시민운동의 다양성과 대중적 확산, 특히 남성의 참여확대라는 측면에서 가능성을 보이고 있으며 일정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초막골과 화물터미널, 고속도로 건설 관련 대책활동 사례에서 보듯이 각종 대책위원회 활동의 경우, 사안에 따라 시민단체와 주민조직, 그리고 직능단체까지 참여하여 폭넓게 이루어졌다. 이제 시민운동은 소수 시민단체의 한계를 넘어 대중적 시민운동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군포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긍정적인 에너지로 승화될 수 있는 가능성으로 등장하고 있다.

제2장 주민자치와 참여정치

이호 |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소장

1. 주민자치와 참여정치의 의미

참여정치는 주권자인 시민이 지역사회의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참여정치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는 시민이 각종 선거에 선거권자 또는 피선거권자로서 참여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의미를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자 의무인 선거권과 피선거권으로 이해하는 것은 지나치게 협소하게 규정하는 것이다. 참여정치는 선거를 통해서 제도정치의 영역에 자신들의 대표자를 진출시키는 것 외에도 직접 자신들의 의사를 표출하고 이를 정치영역에서 수용하도록 하는 행위 일체를 포함한다. 따라서 참여정치는 주민자치라는 개념 속에서 그 의의가 더욱 잘 살아난다.

주민자치라 함은 주민이 스스로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사회를 운영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대의제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현 사회체제는 원론적 의미의 주민자치와는 대립된다. 주민자치의 본래 의미가 직접 민주주의 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반면, 현실적으로 구현되는 대의제 민주주의는 간접 민주주의 체제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다. 대의제 민주주의는 시민의 정치적 참여와 영향력을 지나치게 축소시키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는 민주주의의 본질 자체를 왜곡시키는 것으로 많은 전문가와 시민의 비판을 받게 되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민자치의 의미가 강조

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역사적 함의를 갖는 주민자치는, 직접 민주주의를 원론적으로 강조하기보다는 시민의 참여와 이를 통한 정치적 영향력 강화의 제반 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된다. 이러한 주민자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주민투표제와 주민발안제, 주민소환제 등의 주민참여 제도이다.

군포시에서 나타나는 주민자치와 참여정치의 모습에는 산본 신도시 초기에 소각장 건립을 둘러싼 주민들의 집단적 의견 표출, 각종 민원과 정보공개 청구 행위, 시의 각종 정책과 관련한 집단적 반대 및 시위, 서명운동, 주민감사 청구, 옴부즈만 제도의 이용 등이 모두 포함된다. 그뿐만 아니라 시의 각종 정책 수립에서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등도 참여정치와 주민자치의 한 영역이라 볼 수 있다.

특히, 군포시의 경우 참여정치와 주민자치라는 관점에서 다른 시에 비해 매우 진일보한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는 '통장 직선제'를 일찍이 도입하여 시행해 왔다. 이 정책은 1999년 조례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다. 이 제도를 참여정치와 주민자치라는 관점에서 주목하는 것은 단지 행정의 말단 업무를 보조하는 통장을 주민들의 선거로 뽑는다는 점 때문만이 아니다. 통장 직선제를 도입하면서, 통장의 역할을 '1. 지역주민의 화합단결과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2. 통반장의 발전을 위한 자율적 업무처리'(「군포시 통반장 설치 조례」 제9조 1 · 2호)로 규정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통장을 주민의 직접 참여를 통해 선출함과 동시에 주민자치적 활동의 권한을 통장에게 부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비록 정책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로 인해 2008년 말 조례 개정부터 통장 선출제가 '통장 위촉제'로 환원되었지만, 주민의 참정권 확대와 시정 참여기회 부여라는 관점에서 매우 진일보한 정책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그리고 실제로도 이 정책은 민 · 관 화합과 단결에 기여하는 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1]

그리고 보다 일상적인 주민참여를 매개하는 공간 및 프로그램으로 거론할 만한 것으로는 주민자치센터를 들 수 있다. 군포시는 1999년 시범실시 기간부터 관내 11개 행정동 전체를 시범실시 주민자치센터로 신청, 설립하였다. 주민자치센터는 그 취지 및 기능, 그리고 설립 이후 지금까지 실제 수행한 역할 등을 살펴볼 때 참여정치와 주민자치의 중요한 영역으로 바라볼 수 있다. 군포시의 참여정치와 주민자치를 다루는 이 장에서는 주로 이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그 이유는 크게 네 가지 정도를 들 수 있다.

첫째, 주민자치센터는 참여정치와 주민자치의 영역 중에서 민 · 관 파트너십을 전제로 설립, 운영되고 있다. 주민자치센터가 민 · 관 파트너십을 통해 매우 일상적으로 운영, 작동되고 있다는 점은 민 · 관 파트너십의 다양한 사례 중에서 단연 돋보이며, 참여정치와 주민자치가 실효성 있는 개념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일상적 파트너십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1) 군포시, 2000, 『시정백서』, 263쪽.

2001년 주민자치센터박람회 참석자 기념촬영(홍숙선 소장)

둘째, 주민자치센터는 일상적 공간과 프로그램을 갖고 지난 10여 년간 꾸준하게 활동해 오고 있다. 이는 군포시의 참여정치와 주민자치 영역을 고찰할 때 그 발전 과정이나 내용적 변화 등을 가장 객관적인 근거를 통해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셋째, 주민자치센터는 시민들의 일상적 참여공간으로 그 내용과 영역이 꾸준히 확장되어 오고 있다. 초기의 문화 · 취미 중심의 일회성 강좌를 시작으로 주민들의 참여를 통한 예산 확장과 마을 만들기 사업 등의 주민자치적 활동들이 점차 대세를 이루는 점은, 주민자치센터가 군포시의 참여정치와 주민자치 영역에서 중요한 거점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넷째, 「군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주민자치센터는 주민들의 자치역량 강화와 지역공동체 형성을 주요한 목적으로 삼고 있다. 이는 참여정치와 주민자치의 근간을 확립하는 것과 긴밀히 연결된다. 즉, 군포 시민들의 자치역량 강화와 공동체적 공감대는 참여정치와 주민자치의 긍정적 내용을 가능케 하는 근간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여타 집단 민원과 시정책에 대한 의견표명 등의 형태가 갖는 '요구 · 반대형' 참여와는 다른, 시민 주도에 의한 '대안 창출형' 참여의 근간이기도 하다. 현대사회에서 참여정치와 주민자치가 갖는 의의는 바로 시민들의 대안적 잠재력에 대한 신뢰로부터 시작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군포시 주민자치센터의 변화 · 발전과 지난 10여 년에 대한 평가 · 분석을 중심으로 서술할 것이다.

2. 주민자치센터의 도입과 발전

1) 주민자치센터의 설립 배경 및 경과

주민자치센터 설립에서 군포시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가장 적극적인 선구자로 평가할 수 있다. 1999년 행정자치부가 주민자치센터 시범실시를 계획하자 지방자치단체로서는 드물게 관내 11개 행정동 모두를 시범실시 지역으로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주민자치센터들을 설립하였다. 이는 당시 군포시의 열악한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소하려는 방편으로 시도된 것이다.

주민자치센터는 우리나라 행정체계의 다층화를 간소화함으로써, 지방행정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주민의 문화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그 설립이 추진되었다. 즉, 행정효율성 향상을 위해 읍 · 면 · 동의 기능이 자치단체로 대폭 이관되면서, 그 유휴 공간을 주민들의 정보화, 문화 · 취미 · 여가 활동에 이용하면서 주민들의 자주적 참여를 통해 지역공동체 형성의 구심체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목적으로 당시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의 읍 · 면 · 동 시범실시를 추진하게 되었다. 그 당시 군포시는 신도시 건설에 따른 인구 급증으로 발생하는 여러 문제에 대한 자구적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었다. 인구 급증으로 발생한 문제라 함은 주민 대비 공무원수가 전국 평균보다 낮아서 민원 서비스에서 문제점이 발생하는 점과 더불어 신도시 전입자와 기존 도시 주민 간의 반목,[2] 산본신도시 주민의 95%가 외지에서 이주한 데 따른 정주의식 부족 등을 의미한다.[3] 당시 군포시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여겼으며, 이러한 노력을 실천하는 기제로 주민자치센터를 주목한 것이다.

주민자치센터 설립을 위한 설명회(1999년 5월 12일)

이에 1999년 2월 19일 각 동별 주민대표 846명의 의견을 수렴하여 경기도를 경유, 행정자치부에 시범실시 기관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건

2) 신도시 전입자와 기존 도시 주민 간의 반목은 소각장 입지와 관련하여 매우 첨예하게 부각되었다.
3) 군포시, 2000, 『시정백서』, 241쪽.

의하였으며, 1999년 3월 18일 시범실시 기관으로 확정되었다. 이후 동년 4월 1일에는 주민자치센터 설립 및 운영을 위한 행정지원기획단을 구성하였으며, 4월 22일부터 30일까지 사업결정을 위한 토론회를 동별로 2회씩 개최하여 시설 결정을 위한 주민의견수렴을 실시하였다. 같은 해 4월 27일에는 11개 동 전체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7월 말에는 1차로 3개 동에 주민자치센터를 개설하였고, 9월 중순에 나머지 8개 동에도 주민자치센터를 개소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2000년 2월에는 「군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하여 공포되었다.

주민자치센터 설립과 관련된 주요한 추진경과는 다음 표에서 일정별로 간략하게 표시하였다.

〈표 1〉 주민자치센터 설립 관련 주요 추진일정

일시	주요 내용
1999. 2. 12.	읍 · 면 · 동 기능전환 시범실시 지침 하달(행정자치부→경기도→군포시)
1999. 2. 19.	주민대표 및 시의원 의견 수렴(846명)
1999. 2. 20.	전체 동 시범실시 신청(군포시→경기도→행정자치부)
1999. 3. 18.	시범실시 기관 확정
1999. 4. 1.	행정지원기획단 구성(5급 단장 1명, 7급 2명, 8급 2명)
1999. 4. 22~30.	동별 주민자치사업 결정 위한 의견수렴
1999. 4. 27.	11개 동 주민자치위원회 구성(171명)
1999. 5. 27.	동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및 사업 결정(23종 54개 프로그램)
1999. 7. 28~30.	3개 동 주민자치센터 개소(궁내동, 산본1동, 오금동)
1999. 9. 18~21.	나머지 8개 동 주민자치센터 개소
2000. 2. 21.	「군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공포

출처 : 군포시, 2000, 『시정백서』, 242쪽.

2)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의 발전과정

(1) 프로그램의 양적 · 질적 확대 과정

주민자치센터 설립 초기에는 몇 가지의 일회성 강좌 프로그램과 컴퓨터 및 비디오 감상실을 구비한 채 주민들에게 이를 사용하도록 하는 수동적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점차로 동아리의 구성과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한 불우이웃돕기, 주민자치센터 및 동정 소식지 발간, 수강생 작품발표회 등으로 확대되어 갔다.

프로그램의 발전은 양적인 면과 질적인 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다. 양적인 면에서는[4] 주민자

4) 2000년과 2003년의 현황은 각각 『시정백서』(군포시, 2000 · 2004 · 2008)의 자료를 바탕으로 인용 또는 집계한 것이며, 2009년의 현황은 2009년 2월 현재 각 동 주민자치센터 홈페이지에서 파악한 프로그램수를 집계한 것이다.

치센터 설립 초기인 2000년에 11개 동 전체적으로 103개의 프로그램이 개설되었다. 주민자치센터 당 평균 10개 정도의 프로그램으로 출발한 셈인데, 이는 시범실시 초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도했음을 의미한다. 이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침으로써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됐기 때문에 가능했다. 애초 계획한 54개 프로그램의 두 배 정도 늘어난 양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던 것이 2003년에는 124개로 늘어났으며, 2009년에는 무려 181개로 늘어났다. 이는 2000년에 비해 지난 9년간 약 2배의 양적 성장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표 2〉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현황

(단위 : 개, %)

구분 / 연도	계	주민자치	문화여가	지역복지	주민편익	시민교육	지역사회 진흥	기타
2005	183	33	89	17	5	23	15	1
	100	18	48.6	9.3	2.7	12.6	8.2	0.6
2008	178	10	94	20	6	41	7	–
	100	5.6	52.8	11.3	3.4	23	3.9	–

비고 : ① 이 수치는 군포시 주민자치센터 담당부서에서 경기도 등에 보고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파악하여 기록한 행정문서를 근거로 하였다.
② 2005년은 12월 31일, 2008년은 10월 31일 현황이다.

프로그램의 양적 성장은 그만큼 주민자치센터가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또 많은 주민들이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물론 프로그램 수의 절반 가량은 일회성 강좌에 치우쳐 있다는 문제점을 여전히 가지고 있지만, 주민자치센터 초기와 달리 단순한 일회성 강좌가 아닌 다양한 사업들이 점차 상당한 비중을 차지해 가고 있다. 시민교육사업은 꾸준히 증가하였고, 기타 주민들의 보다 주체적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주민자치사업과 지역사회 진흥사업, 지역복지사업들의 비중 역시 전체 프로그램의 20% 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성장하였다.

위에서 표기한 프로그램의 수는 주로 주민자치센터 공간 내에서 일정한 분기별로 진행되는 프로그램 위주로 계산한 것이다. 그 외에도 자원봉사 동아리의 일상적 활동과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현안에 대한 개선작업 등을 포함하면, 프로그램의 수는 양적으로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매우 발전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금정동의 자원봉사자들이 운영하는 어린이도서관 설치 및 운영, 독거노인들에 대한 '사랑의 문안전화 운영', 산본1동의 불우이웃돕기 사업인 '사랑나눔이 자원봉사회', 연 2회 독거노인 및 결식아동 초청 위안잔치를 수행하는 '더불어회', '어려운 가정 돕기 1가정 1계좌 갖기 운동' 등이 그러한 대표적 사례인데, 그 대부분은 주민자치센터 개소 초기에서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이 외에도 주민자치센터별로 주민들의 주도적 참여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주민자치 프로그램들이 속속 기획 · 실행되고 있다. 예를 들면, 군포1동의 '사랑의 집 고쳐 주기 사업'과 '외국인 근로자 위안잔치', 산본2동의 '행정체험 자원봉사자 운영', 금정동의 '저소득 어린이 무료강좌 및 테마 캠프 운영'과 '수지침 무료시술', 오금동의 '충남 청양군 하성면 7개 리와의 도 · 농 자매결연 체결' 등이 그것이다. 그 밖에도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복지활동,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동민체육대회 및 축제 등의 행사가 대부분의 주민자치센터에서 마을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통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이러한 사업들은 분기마다 바뀌는 일회성 강좌사업과는 질적으로 다른 프로그램들이다. 그 이유는 주민들의 참여가 수동적 강좌 참여에 비해 주체적 참여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며, 주민들 스스로 살기 좋은 지역사회의 대안들을 실천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이다. 즉, 이러한 사업들은 양적인 면으로 측정할 수 없는 주민자치와 참여정치의 핵심적 내용을 실천하는 것들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더욱 크다. 그런 점에서 2000년 중반 이후부터는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중점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도 점점 활성화되고 있다. 산본1동의 '능안공원 분수대 만들기'와 '아파트 옹벽벽화 그리기', 군포2동의 '철로변 화단조성'과 '하천변 꽃길 조성사업', 오금동의 '깨끗한 오금동 만들기 운동', 수리동의 '깨끗하고 쾌적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마을 만들기 사업은 주민들의 주체적 참여가 이루어진다는 점, 주민들 스스로 지역사회의 발전을 가시적인 성과로 추구한다는 점,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공동체의 형성과 자치역량을 훈련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참여정치와 주민자치 측면에서 매우 의의가 높은 사업이라 할 수 있다.

(2) 주민자치 사업의 대표적 사례

이러한 다양한 사업들 중 산본1동의 '사랑나눔이 자원봉사회'와 군포2동의 '출발! 군포의 명소를 찾아서', 대야동의 '로하스 대야동 클러스터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는 간략하게나마 추가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물론, 그동안 군포시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한 사업들 중에는 이 외에도 여러 모범적인 사례들이 있었으나, 특히 이 3개 사업은 전국적으로도 자랑할 만한 군포시의 대표적 프로그램 사례라 평가되기에 별도로 소개하고자 한다.

① 사랑나눔이 자원봉사회 : 산본1동

'사랑나눔이 자원봉사회'는 주민자치센터가 개소되기 이전인 1999년 4월에 결성되었고, 개소 이후 주민자치센터의 핵심적인 자원봉사 동아리 활동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 봉사회에는 주민 20명이 회원으로 참여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정 중에서

수급자로 지정되지 못하는 등 공적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가정에 대한 지원 사업을 주요한 사업으로 실천하고 있다. 구체적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후원업체 발굴 Food Bank를 통한 지원물품 확보
- 요일별 어려운 가정 사랑의 물품전달 지원
- 어려운 가정돕기 바자회 개최를 통한 봉사 활동
- 교회 자원봉사를 통한 정신문화 함양(청소 및 빨래지원 등)
- 위기가정 및 저소득 및 자원봉사 인력뱅크운영 회의 등

② 출발! 군포의 명소를 찾아서 : 군포2동

'출발! 군포의 명소를 찾아서' 는 지역의 어린이와 주민들이 지역사회의 각종 기관들(시청, 시의회, 소방서, 상수도사업소, 문화회관 등)을 방문하여 그 업무 등을 체험하도록 하면서, 자신들이 쾌적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누군가가 지역사회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인식하도록 하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이는 참여자들에게 지역사회에 대한 애정을 갖도록 하고, 어머니와 자녀들의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하는 좋은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성과에 힘입어 이 프로그램은 군포2동을 넘어 군포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시 차원의 프로그램으로 채택되기도 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주민자치센터 개소 초기인 2001년부터 시작되었는데, 청소년문화센터와 공간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한 공간 부족이라는 불리함을 지역사회 자원 활용을 통해 슬기롭게 극복하여 주민들에게 높은 호응을 받은 모범적인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답사 프로그램임에도 저비용 고효율 프로그램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군포2동에서 이 프로그램을 시행할 때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단지 간식 정도의 비용을, 시에서는 답사용 차량을 지원함으로써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었다.

③ 로하스 대야동 클러스터 활성화 : 대야동

대야동은 최근에 개발이 추진되기 시작하여 아직은 농촌 지역의 특성이 강한 곳이다. 주민자치센터의 정착으로 주민교육과 여가선양을 위한 교육문화 프로그램이 증가하는 데에 반해, 주민자치센터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주민화합과 지역의제(agenda) 발굴 등 근린(neighborhood)참여를 비롯하여 지역 내 타 기관과 학교(대학),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체계적인 사업연대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제기되었다. 이에, 농촌의 특성을 살린 지역의제를 발굴하여 이를 실천하고자 하는 사업을 기획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로하스 대야동 클러스트 활성화' 사업이다.

대야동의 전통 장 뜨기 체험행사

대야동 얼음썰매장

지역의제를 발굴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위원회와 통장회의, 반상회, 기타 유관단체의 정례회의 등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그 결과 선정된 지역의제는 다음과 같다.

• 전통 농가에서 재래방식으로 장 담그기 사업 추진

- 농촌 지역 유휴지를 활용한 사업 강구
-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과 협의 철도부지에 철쭉 꽃밭 조성 추진
- 지역 내 체육시설이 전무함에 따라 생활체육시설 확보방안 강구
- 타 기관과 협조 지역 내 현안과제 해결

이렇게 선정된 지역의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 등을 시행하였다.

- 대야미역(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 부지) 철쭉 꽃밭 조성
- 주민자치센터와 누리천문대가 함께하는 '책이랑 흙이랑 별이랑'
- '청소년 자원봉사학교' 개최
- 게이트볼장 확보
- 추억의 얼음썰매장 조성
- 노는 땅 꽃밭 조성 및 올챙이 · 도롱뇽 체험학습장 운영
- 전통 장 담그기 및 슬로푸드 체험단 운영
- 이웃돕기 및 어린이 자연학습 감자재배
- 오리를 이용한 친환경 농법 견학 및 모내기 체험
- 정월 대보름 달맞이 축제

이 사업이 특히 모범적 사례라 평가받는 이유는, 우선 주민들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 주도적으로 계획 · 실천한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라는 점과 일회적 사업들의 나열이 아니라 일정한 주제하에 지역을 총체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과제를 주민들이 도출하고 이를 실천하였다는 점, 끝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지역구성원들이 참여하여 의제를 발굴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 등이다.

3) 주민자치위원회의 발전

초기에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할 당시만 해도 기존의 동정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지역의 유지들 171명으로 구성되었으나, 조례가 통과, 공포된 이후에는 자원봉사자와 강사, 교사 등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겸비한 인사들을 대거 포함시켜 214명이 위촉되었고, 2008년에 이르러 그 수는

〈표 3〉 연도별 주민자치위원 직종 분류 (단위 : 명)

구분 / 연도	계	자영업	통리 반장	직능 단체	주부	회사원	전문직	지방 의원	비영리 민간단체	농축 산업	기타
2005	273	102	13	42	40	20	11	7	10	6	22
2007	277	95	17	40	38	21	8	5	14	8	31
2008	280	104	7	67	41	18	12	6	4	–	21

비고 : ① 이 수치는 군포시 주민자치센터 담당부서에서 경기도 등에 보고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파악하여 기록한 행정문서를 근거로 하였다.
② 2005년은 12월 31일, 2007년은 6월 30일, 2008년은 10월 31일 현황이다.

〈표 4〉 연도별 주민자치위원 분야 분류 (단위 : 명)

구분 / 연도	계	교육계	언론계	문화체육 예술계	사회 복지계	종교계	관계	경제계	기타
2005	273	11	–	10	6	–	11	69	166
2007	277	7	–	10	9	–	6	68	177
2008	280	6	1	14	12	–	4	53	190

비고 : ① 이 수치는 군포시 주민자치센터 담당부서에서 경기도 등에 보고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파악하여 기록한 행정문서를 근거로 하였다.
② 2005년은 12월 31일, 2007년은 6월 30일, 2008년은 10월 31일 현황이다.

280명이 되었다. 이는 조례에서 주민자치위원의 수를 25명 이내로 규정한 것을 고려하면, 제도로서 정한 수를 꽉 채운 상태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여성의 비율이 조례에서 권장하고 있는 30%를 상회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종 및 분야로 구성되고 있다.

위원회의 위촉 방법 또한 발전을 해 왔다. 애초에는 동장(洞長)이 주위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자치위원들을 위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다 보니 기존 지역의 유지 및 자생단체, 시의원 등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그러나 조례에서 공개모집을 통한 신임 위원 위촉을 권유하면서부터 일부 전문가 및 자생단체 임원을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통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이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선임이 비교적 투명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면서 주민들에게 주민자치센터 및 위원회에 대한 홍보효과와 더불어 시민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4) 주민참여 형태의 발전

(1) 동아리 활성화

주민자치센터의 활동 중 주민들의 자치적인 동아리는 센터의 설립목적에 비추어볼 때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는 자치적인 동아리가 그 자체로 주민들이 스스로 형성한 지역공동체라 할 수 있으며, 그 자치적인 운영 경험을 통해 자치의 역량을 훈련시키는 실천적 민주시

2009년 주민자치센터 작품전시회

민 교육의 장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자치적 공동체가 자구적 활동을 넘어 주민자치센터 등을 매개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것으로까지 자신들의 활동 영역을 확장하게 되면, 주민자치적 성격으로 매우 적절한 사례가 될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주민자치센터가 자치적인 동아리를 많이 형성하고 그 활동 영역을 지역사회로 확대하는 데에 기여한다면, 이는 주민자치센터가 참여정치와 주민자치의 중요한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실제 군포시에서 주민자치센터를 매개로 한 주민들의 자치적 동아리들은 양적인 면에서나 질적인 면에서 꾸준히 성장 · 발전해 오고 있다. 통계가 각 연도별로 잡히지 않아 양적인 면에서 정확한 비교는 어려우나, 주민자치센터 설립 초기에는 주로 기존에 지역사회 활동을 해 오던 주민들의 동아리들이 주민자치센터와 결합하거나 주민자치센터의 일부 강좌 프로그램 수강생들이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형태로 동아리가 만들어졌다. 산본1동의 '사랑나눔이 자원봉사회' 나 산본2동의 '영어 · 볼링 · 노래 동아리' 등이 그러한 예이다.

그러던 것이 주민자치센터가 안정, 활성화되면서 점차로 다양한 자치적 동아리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그 활동 영역도 지역사회의 다양한 부문에 걸친 자치적 자원봉사 활동으로 확장되어 갔다. 각 주민자치센터에서도 프로그램 수료생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동아리들이 형성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모임 공간을 제공하는 것과 지역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연결시켜 주는 것 등이 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은 각종 모임을 개최하고, 그 모임에서 익힌 기능과 솜씨를 발휘할 기회를 얻음으로써 지역사회 속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인식하여 일상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해 나갈 수 있게 된다.

예를 들면, 군포1동 '사랑의 푸드뱅크' 사업의 경우 관내 불우이웃들과 자원봉사자들을 연결

시켜 급식지원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도 저소득층 가정에 도배, 장판 교체 및 전기시설 교체 등의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산본1동의 '사랑나눔이 자원봉사회'는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은 자발적 발전을 지속적으로 이루어 내고 있다. 산본2동에서도 2000년에 주민들이 노래를 배우기 위해 형성한 노래동아리가 점차 소년소녀가장을 돕기 위한 길거리 공연 등으로 자신들의 활동 범위를 넓혀 나갔다. 또한 가락장구와 일어회화 수강생들이 수료 후 동아리를 형성하여 자체적으로 자신들의 기능을 연마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각종 행사에 출연하기도 하고 스스로 자원봉사 활동을 기획하여 실행하기도 한다. 이 외에도 수강생들이 자원봉사 동아리를 형성하여 마을의 각종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이제 매우 일반적인 형태가 되고 있다. 동아리의 구성과 활동 내용 확대는 주민들 스스로 지역사회의 각종 복지활동과 자원봉사 활동을 기획하고 실천한다는 점에서 자치역량 강화와 지역공동체 형성을 통해 주민들이 지역사회를 주체적으로 변화 · 발전시켜 나가는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2) 예산편성 참여

시의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시키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은 여러 모로 의미가 깊다. 시장의 가장 중요한 고유 권한이 예산편성권을 행사하는 것이고, 이는 시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영향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권한은 시민들에게 위임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정도는 시민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단순한 명분에서만 그러한 것이 아니다. 시민 참여에 의한 예산편성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고양시키는 효과를 발휘한다. 그러한 점 때문에 국제연합(UN)에서도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 "예산을 인간개발에 우선순위를 두는 방향으로 재조정하는 실천을 통해", "행정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가장 혁신적인 방법 중의 하나"[5]로 평가하고 있다. 물론, 군포시의 사례는 참여예산제를 전격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라 보기 어렵고, '주민의견 수렴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예산의 일부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책정하는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하지만, 시민들이 스스로 예산의 편성 과정에 의견을 제출하고 이를 반영토록 하는 것은 참여정치와 주민자치라는 관점에서

〈표 5〉 연도별 시민참여 예산 책정 건수 및 총액 (단위 : 건, 천원)

구분 \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건수	30	50	62	52	61	68	63	56
총액	1,769,460	7,292,629	5,566,383	4,817,704	4,398,420	4,644,040	5,095,110	3,143,118

출처 : 군포시, 2000 · 2004 · 2008, 「동별 주민의견 수렴사업 추진내역」, 『시정백서』.

5)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2008, 『참여예산, 제도가 아니라 주민이다』, 98쪽.

도 그 의의가 적지 않다.

군포시에서는 주민자치센터가 설립된 이후 시민들의 예산편성에 대한 참여 건수 및 그 액수가 대폭 증가하였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아직 정착을 하기 전인 1999년에 제안하여 2000년에 정식 예산으로 채택된 건수 및 총액은 30건 17억 6,946만 원에 불과하였으나, 주민자치위원회가 정식으로 활동을 시작한 이후인 2000년에 시민들이 제안하여 책정된 예산 건수 및 총액은 50건 72억 9,262만 9,000원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이는 건수로는 전년 대비 60% 증가한 것이며, 액수로는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물론, 그 이후 예산 총액이 다시 소폭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주민자치위원회가 설립되기 이전에 비해서는 상당 정도 증가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5) 외부 평가를 통한 수상 내역

전국적으로도 군포시는 가장 모범적인 주민자치센터 설립 역사를 지니고 있다. 즉, 1999년의 시범실시와 함께 군포시에서는 11개 동 전체를 시범실시 지역으로 신청하여 이를 승인받았다. 이는 군포시에서 지역공동체 형성과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일찍부터 중요한 행정 과제로 설정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노력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주민자치센터 설립 초기에서부터 군포시의 주민자치센터는 각종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사례로 선정되거나, 각종 모범사례로 소개되기도 했다. 〈표 6〉은 지금까지 군포시 주민자치센터가 각종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실적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다.

또한 2005년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에서 경기도 내 7개 시군에 대해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기능 활성화 정도에 대해 자체 평가지표를 통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는데, 군포시는 경기도 내 다른 시군에 비해 우수한 평가점수를 받은 바 있다. 당시 모니터링의 내용은 크게 11가지였다. 모니터링 결과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군포시는 65점을 받아 7개 시군 중 가장 높은 평가점수를 받았다. 다른 시군의 경우 1개 시에서만 50점을 넘었을 뿐 모두 40점대를 기록한 것을 감안하면, 군포시의 평가점수는 월등히 높은 점수임을 잘 알 수 있다. 또한 이 모니터링 사업의 목적이 향후 10년 안에 평균점수를 80점 이상으로 높이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면, 첫 번째 모니터링에서 65점의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은 군포시가 이미 모범적 운영을 하고 있음을 잘 보여 준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관련 프로그램 등의 모범사례를 소개하는 데에도 군포시의 사례들이 다수 소개되고 있다. 주민자치센터 개소 초기인 2001년 행정자치부 수범사례집에는 당동 주민자치센터를 민간 위탁한 사례, 광정동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지역 내 입지한 원광대 부속병원과 함께 경

〈표 6〉 외부 평가를 통한 군포시 주민자치센터 역대 수상 실적

행사명	주최기관	시기	내용	수상내역 및 자치센터
2001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행정자치부 등	2001. 11. 21.	주민자치센터운영 실태 평가	최우수상 산본2동 우수상 군포2동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평가	경기도 (경기인재개발연구원)	2002. 2. 28.	주민자치센터운영 실태 평가	우수상 산본2동
2002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행정자치부	2002. 10. 31.	주민자치센터운영 실태 평가	우수상 군포2동 장려상 군포1동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평가	경기도 (자치행정과)	2003. 2. 24.	주민자치센터운영 실태 평가	최우수상 산본1동
2003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행정자치부	2003. 11. 21.	주민자치센터운영 실태 평가	우수상(주민자치 분야) 수리동
2004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행정자치부	2004. 10. 22.	주민자치센터운영 실태 평가	우수상(지원행정 분야) 군포시 우수상(지역특성 반영 분야) 대야동 장려상(주민자치 및 주민참여 분야) 산본1동
2005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행정자치부	2005. 10. 13.	주민자치센터운영 실태 평가	우수상(주민자치 분야) 대야동

출처 : 군포시청(http://www.gunpo21.net).
비고 : 연도별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는 행정자치부에서 주최는 하였지만, 주관은 열린사회시민연합과 박람회를 유치한 해당 자치단체이다.

〈표 7〉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주민자치센터 모니터링 분석결과

내용	군포시	7개 시군의 평균점수
주민자치위원회 구성방식	6.14	4.19
주민자치위원의 역할 정도	4.57	5.09
자치위원회 회의수	4.14	3.61
자치위원회 회의 활성화	3.29	3.27
자치위원의 권한 정도	7.86	5.18
여성위원 비율	5.00	4.09
소모임수	5.57	2.89
소모임 활성화	6.29	3.77
마을만들기	2.86	1.89
지역자원 활용한 정기 Pro.	2.71	2.40
일반 행사	8.14	7.01
계(총점 87점)	56.57	43.39
100점 환산 점수	65.02	49.87

출처 :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 2005, 『경기의제21 모니터링 보고서 – 도시계획, 주민자치』.
비고 : 모니터링 시기는 2005년 6월 11일~7월 7일이다.

북예천군 용문면과 자매결연한 사례, 군포1동의 자원봉사자를 통한 어린이 공부방 개설 · 운영 사례와 '노인봉사대' 자원봉사 활동 사례, 군포2동의 '사랑의 꽃나누기 행사' 사례가 소개되고 있다. 이러한 모범 사례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이로 인해 현재는 많은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으

로 일반화되기에 이르렀다. 이후에도 군포시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들은 꾸준히 발전을 거듭하였다. 2008년 경기도 차원의 수범사례집에는 주민자치 분야에서 궁내동의 '궁내사랑 자원봉사대' 운영 사례와 지역복지 분야에서 금정동의 '저소득 자녀를 위한 금정학당' 운영 사례가 소개되고 있다.

3. 참여정치와 주민자치 장으로서 주민자치센터의 발전과제

정치는 기본적으로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이루어진다. 실상 의회를 중심으로 한 정치는 정치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보다 잘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이에 일정한 권한을 배분해 주는 과정을 필요로 한다. 그러한 과정이 풀뿌리정치, 참여정치, 주민자치라는 용어의 핵심적 내용이다. 그런 차원에서 주민자치센터의 지역사회 내 위상을 정의한다면,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매개하고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가장 중요한 자기정체성으로 삼고 있다.

주민자치센터가 주민들을 참여시키고, 참여한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과정을 통해 참여정치와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 그러한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정부의 지원 등에 그러한 관점이 중요하게 녹아들어야 한다. 하지만, 주민자치센터의 일상적 활동 속에는 그러한 관점이 미약하거나 전혀 스며들지 않은 경우도 많이 발견될 수 있다. 군포시의 주민자치센터가 비록 여타 자치단체의 그것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발전하였다고 하지만, 곳곳에서 그러한 관점에 근거한 빈자리가 발견되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다.

그러한 현상 몇 가지만 간략히 요약하면, 먼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서 소개한 〈표 2〉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중 강좌식 문화 · 여가 프로그램이 전체 프로그램 중 절반 정도에 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그 비중이 더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곰곰이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에 비해 주민자치 프로그램과 지역사회 진흥 프로그램의 비중은 오히려 더욱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물론, 문화 · 여가 프로그램의 비중이 높다는 것 자체를 문제시할 이유는 없다. 주민들이 손쉽게 주민자치센터의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부담 없는 프로그램이 유리하고, 그러한 점에서 이러한 프로그램도 주민참여 활성화에 중요한 시작의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 프로그램의 대부분이 일회적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강좌식 문화 · 여가 프로그램이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으로서 의의를 충족시키기 위

해서는 참여자들이 해당 강좌를 수강한 후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의도와 기획이 프로그램 기획단계에서부터 꼼꼼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하지만 주민들의 문화 및 여가에 대한 욕구를 강사와 공간을 제공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은 일반 문화센터의 프로그램과 차별성을 가질 수 없다. 이는 주민자치센터의 목적에 비추어 적절한 기획과정이라 할 수 없다. 같은 문화 · 여가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주민들이 강좌를 수강하는 동안 어떻게 주체적인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인지, 이들이 수강 이후 자치적인 동아리를 형성토록 하기 위해 어떠한 동기부여와 유인책을 제공할 것인지 하는 등의 내용이 프로그램 기획단계에서부터 세밀히 고려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와 관련된 것이다. 주민자치센터는 민 · 관협력을 근간으로 하는 커뮤니티센터이다. 하지만 주민자치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그 운영의 주체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민간이 되어야 하고, 그 활동 및 권한이 점차 강화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런 점에서 군포시 주민자치센터의 발전 정도에 비추어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편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외부 전문가들의 평가에서도 알 수 있지만, 구체적인 근거로도 이미 확인된 바 있다. 앞서 소개한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의 2005년 모니터링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이 평가결과에 의하면, 다른 항목과 달리 주민자치위원의 역할 정도는 7개 시군의 평균점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의 회의에 있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주도권을 행사하며 활성화 된 정도를 나타내는 항목에서는 7개 시군 평균보다 0.02점 높은 평가점수를 받은 것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당시의 평가결과는 상대적으로 군포시 주민자치센터의 발전이 행정 주도에 크게 힘입은 것이라는 주장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 따라서 군포시 주민자치센터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 훈련, 인센티브 제공 등의 시도가 있어야 할 것이다.

전체적으로 2000년대 중반까지는 군포시의 주민자치센터가 전국적으로도 모범적인 사례로 많이 거론되었고, 실제 내용적인 발전을 지속적으로 이루어 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각종 지표들에 근거해 살펴보면, 최근 몇 년간 군포시 주민자치센터가 과거의 발전에서 다소 정체된 듯한 지표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주민들이 주체로 참여하는 주민자치 등의 프로그램 비율이 문화 · 여가 강좌의 증가에 비해 줄어들었는가 하면, 주민자치센터에 결합하는 자원봉사자들의 수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표 8〉. 또한 최근 외부로부터 모범적 사례로 표창을 받은 사례도 과거에 비해 대폭 줄어들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설립 초기에 급격하게 확대되었던 시민들의 참여를 통한 예산편성도 2008년의 경우에는 그 수 및 액수가 대폭 삭감된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군포시의 주민자치센터가 다시금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주민자치 프로그램 등 주민들이 보다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업들을 보다 많

〈표 8〉 연도별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활동

(단위 : 명)

구분 / 연도	계	성별		활동 분야별				
		남	여	강 사	시설관리	프로그램 운영보조	프로그램 운 영	기 타
2005	313	93	220	24	30	254	–	5
2007	123	46	77	26	17	10	21	49
2008	43	10	33	7	23	8	5	–

비고 : ① 이 수치는 군포시 주민자치센터 담당부서에서 경기도 등에 보고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파악하여 기록한 행정문서를 근거로 하였다.
② 2005년은 12월 31일, 2007년은 6월 30일, 2008년은 10월 31일 현황이다.

이 개발 · 실행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는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및 훈련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주민자치위원들의 권한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권한 강화 없는 역량 강화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는 이러한 노력에서 행정과 주민자치위원들 스스로의 노력이 결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이러한 과제를 적절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행정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행정에 의지하는 것만으로는 주민자치센터의 발전을 위한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이 강화될 수 없다. 그보다는 주민자치위원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활동역량을 강화하고 활동의 범위를 보다 확대하려는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네 번째로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자신들의 정체성 및 역할을 보다 명확히 인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민자치위원들의 역할은 주민들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참여를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한 매개자이자 활성가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하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주민자치위원들에 대한 선임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주민자치위원들은 그러한 관점에 적절한 역할을 계속해서 찾아내어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제3장 아파트문화와 생활공동체운동

곽도 | 중앙대학교 주택및자산관리최고경영자과정 주임교수

1. 로마에서 출발한 아파트의 역사

인류 역사에서 괄목할 만한 주거문화를 형성한 시기는 로마시대였다. 로마시대 여러 도시에서는 인구가 밀집하고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단독주택은 물론이고 다양한 형식의 주택이 건축되었다. 당시 인구 100만 명 이상이 거주했던 제정시대 로마의 심각한 인구과밀화로 인해 아파트(insula)가 등장했다. 초기 아파트의 구조는 아래층에 상점이 있고 2층에는 임대공간이 있는 소규모의 주상복합주택이었지만, 이는 점차 대규모의 아파트로 발전하였다. 아파트의 규모는 큰 것에서부터 매우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각양각색이었는데, 건물의 높이는 보통 5~6층 정도였으며 연속적인 창이 설치되었다. 큰 규모의 아파트 중앙에는 작은 마당이 있어서 모든 주택에 골고루 채광과 통풍을 부여했다. 길에 면한 아파트의 1층에는 상점이 자리했는데, 이것은 오늘날과 매우 흡사하다.

산업혁명 후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인한 과밀한 도시환경에서 공동주거는 고밀형식으로 전개되어 갔다. 1730년 프랑스에서는 폭이 좁고 긴 두 개의 유닛이 배치되는 저소득층 거주용 아파트가 지어졌다.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는 독일을 중심으로 환경 친화적 생태 건축이 아파트에 적용되면서 자연과 인간이 공생하는 주거생활이 소개되었으며, 네덜란드의 경우 다양한 현대인의 생활양식

에 대응하는 공동주거 유형으로 고층을 지양하고 저층고밀형 공동주거 형태가 출현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현대적인 개념의 아파트는 1956년 행촌아파트가 그 효시라 할 수 있다. 그 후 1958년에는 17.3평형의 종암아파트, 1959년에는 5층 아파트인 24평형 개명아파트가 건설되고, 1962년 대한주택공사에 의해 건설된 우리나라 최초의 단지식 아파트인 마포아파트는 6층 높이의 Y자형 주거동 A · B형을 각각 3동씩 건설하여 450세대가 입주하였다. 1969년 용산구 동부이촌동에 초등학교와 상가, 우체국, 은행, 동사무소 등을 지구 중심에 배치하는 이른바 새로운 개념의 아파트가 근린주구(近隣住區)의 주거양식으로 발전했다. 그러다가 1980년대에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의한 경제력 상승으로 아파트의 다양화가 시도되어 5층 또는 10층 이상의 고층아파트 이외에도 20층 이상의 초고층아파트도 건설되었다.[1]

국토해양부의 2008년 통계에 의하면, 200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한국의 주택은 총 1,416만 8,800호이며, 전체 주택 중에서 공동주택은 777만 7,000호로 전체 주택수의 55%에 육박하고 있다.[2] 하지만 아파트 수명은 선진국에 비해 짧은 것을 볼 수 있다. 1990년대 재건축된 아파트를 분석한 한 연구에 의하면,[3] 외국의 공동주택 평균수명은 미국 103년, 프랑스 86년, 독일 79년, 일본 60년 등으로, 한국의 연립주택 15년, 아파트 19년에 비해서 월등하게 긴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건축 기술이 발전한 요즘에도 우리나라 공동주택의 평균수명은 선진국에 비해서 크게 뒤떨어지고 있다.

〈표 1〉 전국 공동주택 현황[4]

(단위 : 천호, %)

구분 \ 연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호수	6,403	6,677	6,921	7,206	7,470	7,777
증가율	4.4	4.3	3.6	4.1	3.7	3.9

출처 : 「공동주택 현황」, 통계청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

1) 강순주 외, 2008, 『공동주거관리이론』, 교문사, 5~11쪽.

2) 통계청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

3) 방경식, 2002, 『공동주택관리의 합리화 방안』, 주택산업연구원.

4) '공동주택'은 건축물의 벽 · 복도 · 계단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기에 제시된 수치는 「주택법」에 의하여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 현황이다.

2. 신도시 건설과 아파트공동체운동

1) 신도시 건설로 생겨난 산본 아파트마을

군포시는 도시화율이 100%에 달하는 지역이다. 이곳이 도시화되고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한 시기는 1970년대이다. 이 시기 세대 및 인구는 1970년 2,305세대 1만 1,498명에서 1979년 8,087세대 3만 5,823명으로 3배 이상 급격히 증가하였다. 1970~1980년대 안양 7지구 및 8지구 택지개발과 반월신도시(현 안산시) 개발로 유입 인구가 증가하고 기반시설이 확충되면서 1985년 당시 군포읍은 인구가 5만 명을 돌파하였고, 그 결과 1989년에 시로 승격하였다.

군포시는 시 승격 이후로도 20여 년간 지속적으로 도시개발이 이뤄져 왔다. 특히 산본 신도시 건설이 추진되면서 급격한 변화를 맞았다. 1989년부터 신도시 입주가 완료된 1995년까지 산본 신도시권의 인구는 토지수용과 주민이주로 인구가 감소한 1990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최소 7,000여 명에서 최대 4만 7,000여 명이 증가하였고, 그 기간에 총 14만여 명이 증가하였다.

신도시가 들어서기 전 산본동 일대는 버스를 이용하여야 들어올 수 있는 오지였고, 논과 밭, 비닐하우스와 축사 등이 즐비한 시골이었다. 주택공사에 의해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그 이전에 공사가 시작된 산본 11단지 주공아파트(1,400세대, 1992년 11월 11일 준공)도 신도시 계획에 포함되었다. 또 1990년대 후반부터는 기존 중심지였던 당동 일대에서도 택지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그 외에 도시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신도시 건설 이전인 1985년 완공된 구 주공아파트도 2,644세대 규모로 재건축 중이며, 금정역 주변에 대한 뉴타운 개발계획도 수립된 상태다.

2008년 12월 기준으로, 군포시의 아파트 단지수는 122개이며, 세대수는 5만 9,027세대에 달한다.[5] 그중 신도시 지역에 41개 단지 489동 4만 1,007세대, 나머지 지역에 81개 단지 261동 1만 8,020세대가 분포한다. 이 외에도 진행 중인 아파트 건설 현황을 살펴보면, 부곡택지개발지구 2,658세대(2010년 12월 입주 예정), 당동택지개발2지구 2,717세대(2011년 6월 입주 예정), 송정택지개발지구 3,222세대(2012년 6월 입주 예정) 등 총 8,597세대가 건설 중이며, 그중 국민주택 규모인 전용면적 85㎡ 이하는 7,006세대, 85㎡ 초과는 1,591세대이다.

도시개발이 계속되는 동안, 군포시는 도시균형에 맞게 장기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최적의 전원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지 못했다. 그 사이에 택지개발지구들이 중앙정부의 서민주택난 해결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부지가 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는 도시 전체의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균형을 이루도록 도시계획을 적정하게 수립해야 하는데도, 단지 토지수

5) 군포시 주택과, 「군포시 아파트 건축현황」(2008년 12월 현재).

용이 쉽다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미개발지역을 모두 저소득층 주거지역으로 건설하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

군포시가 뒤늦게 중앙정부에 "경기도 내 5대 신도시는 물론 타 시군보다 임대아파트 비율이 25%로 인근 시군(15%)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실정이므로, 임대아파트 형평성을 고려해 볼 때 군포시보다 임대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거나 임대아파트 실수요를 필요로 하는 지역으로 변경 추진할 것을 강력히 건의하며, 임대아파트 비율이 매우 높아 주거환경 악화 및 슬럼화, 도시가치 하락 등의 이유로 군포시의 주민들이 반대여론이 확산되고 있어 현실성 있고 합리적인 주택정책을 펼쳐 주기 바란다."[6]는 내용을 전했으나 이미 중앙정부가 계획을 완료한 이후여서 이를 뒤엎기가 어렵게 되었다.

물론, 임대주택은 서민을 위하여 꼭 필요한 주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현실을 감안하여 직주근접(職住近接)의 원칙을 무시하고, 서울의 도심에서 벗어난 군포시 외곽지역에 한꺼번에 많은 저소득층 임대주택을 집중 건설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한 시와 시민단체의 반대가 적지 않았던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정책에 밀려 군포시는 서민주택도시의 대명사가 되는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 수년이 지난 이제야 임대주택 정책이 바뀌어 도시서민을 위하여 직주근접이 가능한 서울의 역세권에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정책이 실시되고 있어, 이미 건설되고 있는 군포시의 임대주택 과다문제는 앞으로 두고두고 지역의 무거운 짐으로 남게 되었다.

2) 아파트공동체운동의 새 장을 열다

인류는 오랫동안 '공동체적 삶'을 이상으로 삼아 왔다. 특히 현대인은 그 어느 시대의 인류보다 공동체적 삶을 간절히 추구하고 있다. 현대인은 자기가 살고 있는 사회, 그 자체로부터 소외되고 박탈감에 젖어 있으며, 너무 고독하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인간소외 · 비인간화 · 인간성 상실의 살벌한 사회가 아니라 인간 상호 간에 ① 더욱 친밀하고, ② 충분히 서로 이해하고, ③ 더욱 자유롭고 평등하며, ④ 상호간에 더욱 협동 · 부조(扶助)하고, ⑤ 전인격적 관계를 맺으며, ⑥ 감정적 응집을 강화하며, ⑦ 충만을 갖고 느끼며, ⑧ 도덕적 헌신을 하고, ⑨ 더욱 지속적으로, ⑩ 긴밀한 유대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적 삶을 그리워하며 추구하고 있다.[7]

1990년대 초반에 수도권 5대 신도시가 건설되면서, 산본 신도시의 아파트에도 수도권 각지에서

6) 군포시, 「토지임대부 · 환매조건부 분양주택 시범사업에 따른 군포시의 입장」(2009년 10월 19일).
7) 신용하, 1985, 『공동체 이론』, 문학과 지성사, 11쪽.

군포경실련 주최 '제1회 아파트시민대학'(좌)과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위한 토론회'(우)

모여든 주민들이 입주하게 되었다. 입주 초기는 주민들이 재산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아파트의 하자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시기였다. 군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1999년 5월부터 신도시 주민의 재산권문제 해결을 위해 실시한 아파트시민대학은 그러한 정보 공유와 아파트공동체운동을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다.[8] 아파트시민대학은 살기 좋은 아파트 마을을 만들기 위한 공동체 활성화와, 아파트 생활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함께 토론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은 자기 아파트 단지의 애로사항을 공개석상에서 발표하기도 하고 현안에 대해 전문가에게 묻기도 하면서 보다 많은 정보와 지식을 얻고 서로 친밀감을 갖기도 했다.

이러한 활동들은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와 관련한 토론의 장(場)을 마련하여 주민들에게 전문지식을 전달하는 계기가 되었고, 아파트공동체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주민들 사이에서 자발적으로 살기 좋은 아파트마을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도 차츰 퍼져 나갔다. 일례로 당시 산본 H아파트 단지의 경우, 이러한 교육 경험과 협력을 토대로 하자 만료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각 세대별로 개별 하자를 신고받았으며, 공용부분에 대하여는 관리사무소에서 일일이 점검 후 이를 다시 정리하여 건설회사를 상대로 하자에 대한 보완공사 요구를 내용증명으로 보내어 그 자료를 하나하나 보관하게 되었다. 만료기간 전에 하자를 명확히 요구해 놓으면, 설사 기간이 경과한다 하여도 효력을 지니기 때문이다. 그 후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하여 정밀안전진단을 받고 이를 근거로 하자 관련 분야에 가장 조예가 깊은 변호사를 통하여 하자 청구소송을 제기한 결과, 무려 27억 7,0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었다.[9] 이는 NGO가 교육을 통하여 시민들의 생활불편사항을 해결한 모델케이스라 하겠다.

8) 1997년 9월 27일 창립한 군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999년 5월 24~28일을 시작으로 아파트시민대학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운영하였고, '효율적인 아파트 관리를 위한 토론회'(2000년 12월 15일), '지역난방비 인상 관련 토론회'(2001년 4월 16일),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위한 토론회'(2003년 12월 2일),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토론회'(2005년 10월 26일) 등 아파트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도 실시한 바 있다.

9) 당시 아파트 주민들과 군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정밀감사를 벌인 결과, 2년간 동일 견적서를 날짜와 금액만 바꾸어 물품을 구매한 구매비리 20여 건, 6년간 모든 공사의 물품을 수의계약함으로써 주민피해액 약 15억 원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3) 주민 권익과 공동주택 관리규약

아파트라는 주거공간에서 옆집과 불과 20㎝ 벽을 사이에 두고 생활하면서도, 서로 성도 이름도 직업도 모르면서 바쁜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공동주택 생활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아파트 관리지침을 법규로 마련하고 있다. 즉, 아파트의 모든 관리운영을 담은 관리규약을 제정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역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공동주택 표준 관리규약 준칙」을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아파트 단지별 실정에 맞는 관리규약을 마련하여 주민의 동의를 얻은 후 아파트 관리와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다.

경기도의 「공동주택 표준 관리규약 준칙」에서는 관리규약의 목적에 대하여 "공동이익을 증진하고 양호한 주거환경을 확보함"으로 명시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역할에 대하여 "원활한 공동생활을 유지, 재산가치의 보전과 주거생활의 향상,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진행으로 투명한 운영,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수립, 쾌적한 아파트공동체 건설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사업 등을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동별 대표자의 의무에 대하여 "입주자 등의 재산보호를 위해 청렴 · 양심의 의무, 전문적인 능력 향상을 위해 부단히 노력할 의무를 지닌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은 이러한 표준 관리규약에 의거하여 작성된 한 아파트의 관리규약과 대표자회의 운영규정의 일부다. 그 내용에서 주민들의 공동이익과 투명한 운영 등에 대한 다짐을 엿볼 수 있다.

수리한양아파트 관리규약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주택법 제44조 2항 및 동 시행령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수리산길 141 소재 수리한양아파트 단지 내의 공동주택,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 및 부속물을 관리 및 사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주자와 사용자(이하 "입주자 등"이라 한다)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고 양호한 주거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규약 등의 준수의무)

입주자 등은 원활한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택 관계 법령과 이 규약 및 이 규약에 따른 제 규정(이하 "관계규정"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입주자 등의 의무)

① 입주자 등은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입주자 등은 재산가치의 보전과 주거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제반 시설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 보전, 유지하여야 한다.

수리한양아파트 입주자대표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리한양아파트 관리규약에 의거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리한양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진행으로 투명한 운영과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중략)

6.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수립
7. 쾌적한 아파트공동체 건설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사업

제33조(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의무)

입주자대표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의 참석의 의무
2. 입주자 등의 재산보호를 위해 청렴, 양심의 의무
3. 전문적인 능력 향상을 위해 부단히 노력할 의무
4. 입주자 등의 의견수렴 의무

그러나 관리규약에 명시된 바와 달리 아직까지 많은 아파트 단지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주민대표 역할을 제대로 다하지 못하는 실정이며, 관리 주체인 관리사무소장과 사적 단체인 부녀회와의 관계도 매끄럽지 못한 경우가 많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입주자대표회의와 부녀회가 합심하여 아파트단지 일을 잘 운영하는 곳은 손꼽을 정도로 적은 숫자다. 아파트 관리의 지도 · 감독을 법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자치단체도 손을 놓고 있어 아파트 관리는 행정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3. 주민이 참여하는 아파트마을 이야기

아파트 관리와 운영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부 아파트 부녀회장과 관리소장이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러한 사례는 아파트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 그러한 사례들 중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산본 11단지 주공아파트 주민들의 태안 기름유출 방제 자원봉사

1) 산본 11단지 주공아파트

산본 11단지 주공아파트는 신도시가 건설되기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로, 현재 산본 신도시 내에 존재하는 가장 오래된 아파트 단지이다. 이곳에서는 봄이면 노란 유채꽃이 만발하고, 가을이면 봉평에서나 구경할 수 있는 하얀 메밀꽃을 심어 도심 속에서 시골의 정취를 느끼도록 친환경 아파트 마을을 만들어 놓았다. 메밀꽃 씨앗은 봉평에서 직접 구입하여 씨앗을 뿌렸으며, 유채꽃 씨앗은 한 해 한 말씩이나 수확하여 인근 안양천변에 뿌리기도 했다. 떨어지는 낙엽을 밟으며 사색에 젖게 하는 '낙엽의 길' 도 만들어 놓았다. 산본 11단지 주공아파트 관리소장인 신동문 씨가 33년간 관리사무소장으로 재직하며 익힌 노하우를 마음껏 발휘한 것이다.

이 아파트는 입주한 지 17년이나 되어 수도관에 녹물이 나오고, 꼭대기 층에는 수돗물이 올라오지 않아 세탁기를 돌리기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승강기 고장도 너무 잦았다. 그래서 수도배관 누수공사와 승강기 고장에 매달리는 것이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일과였다. 이에 관리 주체와 동대표 부녀회가 합심하여 녹슨 수도배관의 녹을 제거한 후 에폭시를 발라 녹물문제를 완전히 해결함으로써 이제는 발암물질이 있는 녹물을 먹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부스타 펌프를 설치하여 옥상

산본 11단지 주공아파트부녀회의 김장 봉사

의 녹슨 물탱크를 없애고 각 세대로 직접 수도를 공급토록 하면서, 꼭대기 층에서도 수압이 균등하게 되어 세탁기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승강기도 틀만 남긴 채 새것으로 모두 교체하였고, 단지 내에 CCTV 52대를 새로 설치하여 범죄예방에도 나섰다. 이에 사용된 공사대금은 장기수선충담금으로 올려 분할 상환토록 하여 저소득층의 부담을 덜어 주었다. 신동문 소장은 이렇게 짧은 시기에 한꺼번에 여러 공사를 한 것은 국내에서 처음이라면서 '알아야 면장을 한다.' 는 옛말처럼 아파트 관리는 경험이 너무 중요하다고 한다. 이 아파트의 성공 사례는 밖으로도 알려져 지금은 인근 아파트 단지에서도 녹슨 수도관 공사에 대한 문의와 견학이 늘고 있다.

한편, 이곳은 부녀회의 활동도 매우 활발하다. 1996년부터 현재까지 부녀회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는 조점식(여, 54세) 부녀회장은 국악과 경기민요를 가르치느라 바쁘게 생활하고 있다. 매년 한마음축제 등 시민축제에는 빠지지 않고 문하생들과 함께 참여하여 봉사활동을 펴오고 있다. 국악은 먼저 구음으로 장단을 맞추어 익히는 연습부터 시작하며, 민요를 하면서 장고로 장단도 함께 맞춘다고 한다. 부녀회원들은 그렇게 연습한 실력을 노인잔치를 열어 발휘하기도 한다. 또한 가을이면 매년 노인정에 100포기 정도 김장을 해 드리며, 어버이날 효도관광도 빠지지 않고 챙겨 드린다. 이 아파트의 노인회 회원은 45명인데, 매일 20여 명이 노인정에서 여가를 보내고 있다.

다른 단지에는 동대표와 부녀회 간에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이곳 주민들은 서로 단합이 잘된다고 자랑한다. 그래서 월드컵처럼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행사 때에는 동대표와 부녀회

가 단체로 옷을 맞춰 입고 응원하는 등 서로 적극 협력하고 있다. 국경일이면 전 세대가 국기를 게양하여 군포시장으로부터 표창장을 받기도 했다. 또한 이곳은 열관리 우수단지로 선정되어 수상한 바 있다.

2) 당동 무지개마을 대림아파트

당동 무지개마을 대림아파트에서는 석만자(여, 49세) 씨가 2009년 현재 4년째 부녀회장직을 맡고 있다. 석만자 부녀회장은 입주 초기부터 부녀회활동을 하면서 기존의 부녀회에 대한 주민들의 좋지 않은 인식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특히 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에 가장 신경을 많이 쓴다. 2007년에는 너무 풍작이라 값이 싸진 제주도 감귤을 직접 아파트에서 팔아 주었고, 괴산의 옥수수도 산지에서 가지고 와 300자루나 팔았다. 지난해에는 옥수수 재배 후 심은 배추가 너무 풍년이 들어 산지에서 갈아엎기까지 한다는 소문을 듣고, 현지에서 배추절임을 직거래하여 필요한 일자에 맞추어 택배로 배달하면서 무려 600만 원어치나 팔아 주었다. 양파가 쌀 때는 중간상인을 배제한 채 현지에서 갖고 와 그 자리에서 다 팔았다. 예산에서 생산한 고구마 200박스를 이틀에 다 팔기도 했다. 태안 기름피해로 김을 잘 먹지 않을 때 광천 김도 많이 팔았다. 1,000세대가 조금 안 되는 단지 규모에서 참기름을 700병이나 팔 정도로 부녀회에 대한 주민들의 이미지는 상당히 좋다.

이렇게 판매하는 농산물의 가격은 산지의 경매가격 정도로 싼데다가 농산물 판매수수료를 500원 정도로 최소한만 받기 때문에 실제 현지 농가에서 구입하는 가격보다도 더 저렴하다. 유통마진이 거의 없다보니 농민은 돈을 많이 받아 좋고, 주민들은 값싼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어 부녀회에서 공급하는 현지 직거래 농산물의 인기는 매우 좋은 편이다.

단지별로 일어나고 있는 입주자대표회의와 부녀회와 갈등은 아파트 단지 내의 잡수입 관리문제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석만자 부녀회장은 잡수입에 대한 잡음을 없애기 위해 부녀회가 주축이 되어 주민 과반수의 서명을 받아 잡수입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장과 부녀회장이 공동관리하도록 규정을 고쳐 서로간의 불신과 갈등을 방지하였다. 이 단지의 잡수입 처리는 부녀회에서 직접 관장하지 않고, 기금 운영의 투명화를 위해 입금과 출금을 관리사무소에서 관장하며 잡수입의 지출 시에는 동대표회장과 부녀회장이 공동으로 사인하여 지출토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부녀회가 직접 돈을 관리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방지함으로써 주민으로부터 불신을 없애는 데 기여했다.

이곳에서는 주민의 화합을 위한 문화활동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케이블 방송에서 진행하는 '행복노래방'을 유치한 바 있고, 2009년 6월에는 군포시가 지원하고 군포예총이 주관하는

2009년 6월 2일 개최된 무지개마을 대림아파트의 '찾아가는 미술관 및 찾아가는 시의 향기전'[10]

'찾아가는 우리 마을 음악회' 와 '찾아가는 미술관 및 찾아가는 시의 향기(시화전)' 를 유치하여 주민들의 문화향수권 신장에 기여하고 이를 주민바자회와 연계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음성청년회의소와 자매결연하여 가을이면 음성군에서 개최하는 고추축제에 참석하고, 각종 산업체 견학도 열심이다. 부녀회원들은 이러한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뒷바라지하면서 실무적으로 꼼꼼히 챙겨주고 있는 김원기 관리소장의 역할이 자못 크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한편, 안양 · 군포 지역 6개 대림아파트 부녀회장들은 정기적 모임을 통해 정보교환을 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열 계량기나 배터리 등의 부품가격을 3분의 1 수준으로 낮추어 수백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기도 했다.

3) 당동 LG자이1차아파트

당동 LG자이1차아파트는 군포시에서 조경이 가장 잘된 단지로 꼽힌다. 전유배 관리소장은 조경 분야에 각별히 많은 심혈을 기울인다. 그는 조경에 대한 외부 강의도 가끔 하고 있는 전문가이다. 단지 내의 수목에 대하여 봄과 여름 2회에 걸쳐 전지를 하며, 나무에 따라 특색을 살리고 있다.

10) 「이미지자료실」, 군포예총(http://www.gunpoart.or.kr).

2009년 5월 20일 개최된 당동 LG자이1차아파트의 '찾아가는 우리 마을 음악회'[11]

그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 내의 조경은 역시 소나무가 제일로 손꼽히는 수종이며, 소나무의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丁)' 자 모양으로 가꾸어 나무 끝이 옆으로 평평하게 퍼져 있어야만 보기에 좋다고 한다. 주목(朱木)의 경우 뭉게구름 모양으로 끝을 둥글고 몽실몽실하게 하여야 좋다고 한다. 그는 자신이 가진 조경 전문지식을 직원이나 경비원에게 교육을 시켜 단지를 아름답게 꾸미는 일을 함께하는데, 특히 연말에 설치하는 크리스마스트리는 인근에서 명물로 자리 잡았다고 자랑한다.

이곳의 부녀회(회장 이영숙)는 봉사활동으로 바쁘다. 453세대의 부녀회원은 10명으로, 회원들은 매월 한 번씩 노인복지회관을 찾아가서 설거지 봉사를 6년째 하고 있다. 또한 '산돌사랑의집' 의 독거노인들에게 떡과 음식도 갖다 드린다. 이곳에서도 문화활동을 위해 노력 중인데, 무지개마을 대림아파트와 마찬가지로 '행복노래방' 과 '찾아가는 우리 마을 음악회' 를 유치한 바 있다. 이 외에도 아파트공동체 활성화와 주민 간 친교를 위해 단지 내 부부 · 가족들이 참여하는 야유회를 준비하고 있다.

11) 「이미지자료실」, 군포예총(http://www.gunpoart.or.kr).

4) 산본 6단지 세종아파트

산본 6단지에 위치한 세종아파트는 1,827세대의 대단지이다. 이곳에서는 매년 정월대보름 맞이 윷놀이 마당을 마련하여 주민 간의 친목을 다지고 있다. 주민들의 동아리로는 세종축구회, 세종테니스회가 활성화되어 있고, 자원봉사자들로 조직된 자율방범대가 오후 10시부터 12시 사이에 방범 순찰을 실시하여 입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

또한 1996년에 출범한 세종장학회는 장학기금 3,000만 원을 기증받아 입주민 중 형편이 어렵거나 모범이 되는 학생 및 효행자 등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2008년 현재까지 총 10회에 걸쳐 단지 내 중·고등학생 97명에게 총 1,59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하였으며, 선행 및 효행심이 높은 주민 10명에게 16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하였다. 세종장학회는 장학증서 수여식과 함께 주민노래자랑, 어린이 댄스경연, 불꽃놀이 등 다양한 주민축제도 함께 개최하고 있다.

한편, 한기호 관리소장은 아파트 리모델링에 대하여 주민의 관심이 많아 몇 번의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다며, 아파트공동체를 만들려는 노력이 활발한 속에서도 과거의 시골정서를 닮은 가족처럼 함께 오손도손하게 지내는 아파트를 만드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고 한다. 아파트에 대해 순수하게 거주공간으로 인식하는 차원을 넘어 재산 개념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아직도 만연하기 때문에 공동체적 삶의 유대를 만들어 가는 데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산본 6단지 세종아파트의 세종장학회 장학금 수여식

4. 생활공동체로서 생활협동조합운동

아파트공동체운동과 함께 생활공동체를 지향하는 중요한 움직임으로 생활협동조합운동을 들 수 있다. 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이란 상부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생산자 ·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협동조합으로 생산자 · 소비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비영리조직이다. 생협운동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인들의 협동운동으로 소비자들이 직접 조합을 만들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공동구매하고, 자신들의 삶의 모습을 협동조합정신에 맞게 변화시켜 나가는 지역사회개발운동이다.[12] 생협은 조합원들이 개인보다는 협동해서 더 잘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활동의 대상으로 삼고, 경제적 효과, 사회적 효과(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사고와 활동 유도, 민주시민 의식의 제고와 자질 함양, 주민자치의 정착 및 건강한 생활문화 향상), 복지적 효과(조합원들의 복지의식 함양)로 지역사회 주민공동체의 산물이자 복지공동체로서 역할을 한다.

한국에서 생협운동은 1980년대 초반에 전통적인 소비자협동조합의 형태로 시작되었다. 이러한 형태의 생협운동은 나름대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1980년대 후반부터 이루어진 유통업의 대규모 자본 소비형태의 변화로 점점 쇠퇴하였다. 그러던 중 1980년대 후반부터 유기농산물 구매공급 사업을 위주로 하는 생협운동이 시작되었으며, 이러한 생협운동은 1990년대 들어서 농업과 환경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배경으로 급속한 성장을 이루어 왔다. 그리고 1990년대 후반에는 새로운 유형의 사업내용을 가진 생협운동의 등장으로 생협운동의 저변 확대와 다양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군포 지역에서 활동하는 생협은 군포생협, 군포YMCA생협, 여성민우회생협 군포지부, 한살림 경기남부 군포지부생협이 있다. 이들 단체는 생협이라는 동일한 목적으로 창립되어 각자의 조직을 기반으로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데, 그 출현과 활동도 신도시 건설로 인한 인구 급증 및 인구 특성의 변화와 동떨어져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군포 지역의 특징이다.

1) 군포생활협동조합

군포생협은 1999년 12월 28일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2002년 1월 26일에 설립되었다. 당시 91명의 조합원으로 시작하여 2008년 12월 현재 550여 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생활재 이용률은 100%이다. 주요 활동으로 13개의 마을모임과 3개의 동아리(발도로프 인형 만들기, 텃밭 가

12) 구본영, 2004, 『현대지역사회개발의 이해』, 형설출판사, 62쪽.

2008년 멜라민 파동 시 군포생협의 멜라민 안전지대 홍보[13]

꾸기, 책 읽기 모임), 4개의 위원회(홍보 · 급식 · 물품 · 정책)를 운영하고 있다. 마을모임의 경우 전국에서 회원수 대비 가장 많은 마을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조합의 활동 소식과 일정 · 식품 · 물품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서로 살림』을 매월 1회씩 발행하고 있다.

군포생협은 어린이 식품안전교육 체험으로 많은 성과를 얻었으며, 사업추진에 공신력을 높이고 각 기관과의 협력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화를 추진 중에 있다. 유기농식품에 대한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유기인증센터를 연합회에 설치하여 식품에 대한 정기검사 이외에도 부정기적으로 불시검사를 하고 있으며, 재배지의 토양검사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 이 생협의 활동 중에서 특별한 것은 한국현대사와 지방자치에 대한 강좌를 듣고 토론하는 '자랑방' 이라는 남편모임을 들 수 있는데, 이 모임은 지역문제에 대한 남성들의 관심을 이끌어 내는 계기가 되고 있다.

한편, 이 생협의 마을모임에서는 2008년 1월부터 '사랑의 모자 뜨기' 를 실천하고 있다. 사랑의 모자 뜨기란 국제아동보호기구인 '세이브더칠드런(Save the Children)' 에서 아프리카나 동남아의 신생아들에게 털모자를 떠서 보내주는 캠페인이다. 아프리카는 연중 높은 기온을 유지하는 곳이지만, 예상 외로 아침저녁 일교차가 심하다. 그래서 영양 결핍, 조산아로 태어나 저체온증으로 사망 위기에 처한 아이들에게 체온을 유지해 줄 수 있는 털모자를 떠서 전달하는 캠페인을 벌이게 된 것이다. 털모자 하나로 신생아의 70%를 구할 수 있다고 한다.

생협활동에 대한 조금순(여, 50세) 군포생협 이사장의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조금순 이사장은 생협 발전을 위해서는 회원이 늘어나야 하는데, 회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생협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야 하고 생협에 대한 인식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매장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매장이 늘어야만 소비도 늘어나고 이와 함께 생산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회원수가 10만 명에서 많게는 70~80만 명에 이르다 보니 자연히 회원이 원하는 사양에 따라 제품을 만들 수 있다. 그 외에도 일본에서 생협은 40~50대 주부들이 모여 도시락사업, 청소사업, 작은 학교, 케어사업, 반찬사업 등을 하면서 고용도 창출하고, 지역사회에 여러 가지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한다.

다음으로는 정책적으로 활동가를 육성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한다. 괴산군, 장수군, 광주시 등에는 생협 매장을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지원하여 지역의 농산물을 보급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지역 주민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보급하면서 지역의 농업도 함께 지킬 수 있기 때

13) 「행사사진」, 군포생협(http://www.ecofamily.net/bbs/gpcoop/html/default.php).

문이다. 그러나 조합들 중에는 상근자들을 위한 운영비만큼의 수익을 내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고 한다. 최소한 교통비와 식대지급이라도 되어야 하나 그것조차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이다. 이러다 보니 상근활동가가 떠나기 일쑤다.

군포생협은 2009년 산본 신도시에 매장을 갖추고 회원 확대와 함께 생협을 알리는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조금순 이사장은 일본처럼 40~50대 주부들이 참여하는 도시락사업이나 케어사업, 청소사업 등으로 생협을 사회적이고 모범적인 기업으로 만들어 일자리도 늘리고 사회에 기여하여,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스페인의 몬드라곤 같은 생협을 만들고 싶은 게 꿈이라고 한다.

2) 군포YMCA생협

군포YMCA생협은 2000년 8월 안양YMCA로부터 산본 신도시 중심의 생협 홍보사업 등을 시작한 것이 첫 출발이었다. 처음 사업으로 촛불강좌, 생산지 견학 등을 실시하였고, 2002년에는 동아리 '에움길', '우리가락 사물놀이' 등을 구성하였다. 2003년부터는 동아리 활성화를 위해 '텃밭농사'는 매월 1회, '에움길'과 '신명나는 풍물굿' 등은 매주 1회 정기모임을 갖게 되었다. 군포YMCA생협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 2005년 4월에 조합원 105명으로 창립하여 10개의 등대공동체와 3개의 동아리(신명나는 풍물굿, 에움길, 하늘땅 별땅)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생협에서는 조합원 개개인을 자신의 몸을 태워서 주변을 밝힌다는 의미의 상징으로 촛불이라 칭한다. 등대란 개개인 촛불들이 모여 공동체의 삶을 소중하게 돌아보는 모임이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YMCA생협을 내부적으로는 등대생협으로 칭하기도 한다.

군포YMCA생협은 2008년 12월 현재 총회원 114명, 등대 편성 인원 73명으로 운영된다. 교육활동 및 행사로는 촛불대학, 식품안전교육, 방학특강, 아기스포츠단, 운동회, 먹을거리 참여, 생산지 견학, 촛불축제, 사랑의 김장나누기, 녹색가게 개장 등을 진행하고 있다. 동아리활동으로는 신명나는 풍물굿이 매주 모임을 갖고 월 1회 공연하며, 에움길도 매주 모임을 갖고 발도르프 인형극 공연과 발도르프 미술예술 치유강좌를 개최하고 있다. 하늘땅 별땅 모임에서는 시농제와 가족운동회, 촛불여행 등을 실시하고 있다.

YMCA생협은 촛불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책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와 사회적 실천활동을 통해서 배우고 있다. 자신의 생활을 나누는 연습을 하면서 각자 갖고 있는 능력을 찾아내 키워 주고, 사회문제에 활동하고 리더로서의 자질을 갖추면서 사회참여를 높이고 있다.

3) 여성민우회생협 군포지부

1989년 12월 한국여성민우회가 창립한 지 10년 후인 1999년 4월 30일에 군포여성민우회가 창립되었다. 군포여성민우회는 창립 이전부터 마을모임으로 생협활동을 해왔으며, 2000년에는 단위생협을 발족하였다. 여성민우회생협 군포지부에는 2008년 12월 현재 300여 명의 조합원이 가입해 있는데, 운영방식은 다른 생협과 조금 다르다. 조합원마다 2만 원 출자에 1만 원 가입비, 이용 시마다 1,000원씩 재출자하는 방식이며, 생활재의 주 인기품목은 쌀, 콩, 계란(유정란) 등이다. 이곳에서는 공해 없는 먹을거리와 가공식품을 개발하는 활동뿐만 아니라 여성의 사회진출을 확대하는 운동을 함께하고 있다. 교육으로는 주로 환경강의, 요리강좌, 생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조직으로는 마을모임과 건강소모임, 거북이 산행모임, 영화보기모임, 독서소모임 등이 있다.

군포여성민우회 홈페이지 주 화면에 있는 생협 메뉴에는 "군포여성민우회에 놀러오세요~ 군포여성민우회 사무실엔 회원들의 수다방 '작은가게'가 있어요!! 작은가게에서는 환경, 건강에 관한 고민을 나누고 대안을 함께 찾아가요. 지긋지긋한 아토피 관련 환경질환, 바른 먹을거리와 생태적인 삶으로 몰아낼 수 있습니다. 새로 개발된 생활재도 시식할 수 있어요. 우리의 의견을 생산지에 건의하여 우리가 원하는 생활재를 생산자와 함께 만들어 낼 수도 있답니다. 우리가 이용하는 생활재가 늘어날수록 지구의 생태계가 회복되고 식량자급율도 높아진답니다. 작은 가게에서 생활재

여성민우회생협 군포지부의 친환경농업 교육[14]

14) 「시진자료실」, 군포여성민우회(http://gunpo.womenlink.or.kr).

이용으로 만나요~"라고 적혀 있어, 그 활동과 방향성을 알려준다.

여성민우회생협 군포지부의 김묵순 사무총장(여, 43세)은 생협의 현실에 대하여 "조합원의 참여도가 부족하여 조합원 중심보다는 상근자 중심의 활동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자발적인 모임이 적다. 천천히 느리게 지속 가능한 생협 철학을 보급하는 데 미흡했다."고 진단한다. 특히 2004년 8월 일본 지바현의 생협 연수에서 일본과 많은 차이를 느꼈다고 한다. "일본은 비전센터를 중심으로 지역공동체의 형성을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으며, 조합원 스스로가 다음 세대의 복지를 위해 지역화폐를 사용하고 있으며, 전 국민의 20% 정도가 환경병인 아토피가 발병하여 생협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았다. 복지시설도 생협에서 운영하고 있었다. 일본은 전 인구의 20%가 생협 조합원이나 한국은 2%에 불과하다."고 한다. 즉, 일본은 전 인구의 5분의 1이 자국 농산물을 이용하고, 토종씨앗을 지켜 자가 씨앗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김묵순 사무총장 역시 한국에서 생협운동 활성화의 관건으로 회원 확보를 꼽으며, 지구와 건강을 지키기 위한 환경운동이 꼭 필요하다고 한다. "학교마다 우리나라 볍씨 키우기 운동을 한다면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이 될 것이며, 군포시에서 사용하는 생활재만이라도 생협 물자를 이용한다면 생협의 발전에 많은 기여가 될 것이다."라고 한다. 건강한 시민의 삶을 위하여 지역 활동가들의 노력이 보태어져 군포시가 일상생활이나 환경 등 여러 면에서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지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란다.

4) 한살림 경기남부 군포지부생협

한살림은 1986년 작은 쌀가게에서 시작해서 1989년 창립하였으며, 우리나라 생협운동을 대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살림은 생명살림 가치를 실현하고자 조합원 스스로가 안전하고 바른 먹을거리를 통해 건강한 삶을 가꾸고, 생명과 공생의 의미를 삶속에서 실천하고, 도시와 농촌의 지속적인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서로 깊이 이해하며 환경과 먹을거리의 오염 및 식량위기의 문제를 협동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을 지향한다. 또한 조합원들의 다양한 참여로 이루어지는 공동체 모임을 활발하게 꾸리고, 지역에 밀착된 활동을 통해 지역문제에 관심을 갖고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며, 지역에 생명살림의 문화를 전파하는 것을 지향한다.

한살림 경기남부 군포지부생협(이하 '군포한살림')은 2005년 5월 조합원 1,750명으로 창립하여 2008년 12월 현재 조합원이 2,400명에 이른다. 조합원 가입은 출자금 3만 원과 가입비 3,000원으로, 탈퇴 시에는 출자금을 반환하고 있다. 미래세대를 책임질 아이들과 함께하는 생명학교 활동, 조합원의 요구를 담아낼 수 있는 다양한 성격의 위원회와 모임을 만들어 생활 전반을 같이 고민하고 있

한살림 매장에서 매월 1회 열리는 녹색장터[15]

는데, 이를 위해 5개 분과(물품, 교육, 문화, 식품안전, 나눔공동체)와 8개의 모임(아미모, 나가놀자, 행님아 나가놀자, 참살이 속의 아이들, 바느질 모임, 손으로 만드는 즐거움, 학습모임, 교과서모임)을 운영하고 있다. 소모임은 생일잔치, 알뜰시장, 요리교실, 텃밭 가꾸기, 아토피 예방을 위한 먹을거리 공부, 대안생리대 만들기, 책 읽기, 교과서 분석과 놀이 등이 활성화되어 있다.

최은순(여, 46세) 지부장에 따르면, 군포한살림은 각종 행사활동 및 요리교실을 통하여 조합원들의 관심과 직접 접근의 기회를 갖게 되었고, 생산지 방문으로 물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지역살림학교, 달맞이모임, 식품안전교육활동, 텃밭 가꾸기, 방학프로그램, 연대활동, 알뜰장터, 식품첨가물 공부를 통해 가공식품과 탄산음료, 인스턴트식품의 문제점과 인체에 주는 피해를 접하는 기회도 만들고 있다. 또한 안양 지역과 함께 물류센터를 운영하며 주 5일 직접 공급제도를 시범 실시하고 있는데, 사과 · 포도 등의 과실류와 딸기 등의 과채류, 두부 · 콩나물 등의 주요 식재료가 이용자에게 인기가 높다고 한다. 군포한살림은 직영 매장을 이용하는 조합원이 1,700명이나 되어 앞으로의 성장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

15) 「군포지부」, 한살림 경기남부생협(http://ggnb.hansalim.or.kr).

5) 생협네트워크

2004년 4월 군포생협, 군포YMCA생협, 여성민우회생협 군포지부, 군포한살림이 모여 학습모임을 시작하면서 지역 내 생협운동단체 간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 이들 4개 생협은 매월 1회 생협 · 환경 · 생명 및 공동체운동과 관련된 내용을 공부하면서 서로의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각 단체의 행사에 협조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공동으로 교육 및 행사를 주최하고, 연대를 통해 지역공동체를 만들기로 합의하였다.

생협네트워크는 그 이후로 지속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2004년 8월 27일에는 군포신용협동조합 설립자인 이건우 선생 3주기 추모제에 참석하였다. 또한 친환경쌀 생산지를 방문하고 중심상업지역에서 공동바자회도 개최하였다. 11월에는 '생협과 지역공동체' 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연말에는 2005년 학습계획과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송년회를 개최하였다. 2005년에는 두 차례의 토론회와 생협학교를 운영하였고, 2006년에는 워커즈콜렉티브 연구회를 결성하여 월 1회 정기 학습회를 가졌으며, 3월에는 한 달간 이사 공동교육을 실시하고 오사카의 알파쿠프(생협) 전무 초청강의를 진행하였다. 이외에 생협과 군포비전 만들기 강좌도 4회에 걸쳐 열었다. 2007년에는 제3기 생협학교를 개강하여 총 4번의 강의에 95명이 수강하였고, 푸른희망군포21실천협의회와 공동으로 탄소발자국사업을 진행하였다. 2008년에는 광우병의심 미국산 수입쇠고기 판매저지 공동대응활동과 벼룩시장을 개최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생협네트워크는 4개 생협이 연대하여 공동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생협 간 협동을 실천하였고 지역에 기여한 바가 컸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업을 시도하면서 단체들의 힘이 집중되지 못하고 분산

2009년 10월 17일 개최된 생협네트워크의 벼룩시장 풍경(좌)과 한 어린이의 안내문(우)[16]

16) 「행사사진」, 군포생협(http://www.ecofamily.net/bbs/gpcoop/html/default.php).

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앞으로는 연대의 힘이 필요한 이슈를 개발하여 선택적으로 집중해야 한다고 평가된다.[17]

5. 아파트공동체 활성화의 조건

아파트공동체란 '정감이 넘치는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하여, 거주자들 간의 긴밀한 접촉과 지속적인 참여를 통해 집단적 유대감을 형성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삶의 질을 높여 가는 아파트 주민의 집단적 활동' 이다.[18]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집단적인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리더가 자기 자신의 사욕을 버리고 올바른 생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할 때에만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하겠다.

아파트 단지의 경우 주민 대표조직인 입주자대표회의가 법령에 의한 공식적인 주민자치기구로서 아파트 단지 내의 공동체적 생활과 관련되는 모든 사항을 관할하고 있으나, 공동체운동의 개별사업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산하단체인 부녀회의 주도하에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두 조직 간의 긴밀한 협력이 요구되고 있으나 현실은 이와 거리가 먼 것이 사실이다. 아파트 단지 내의 수익사업을 두고 입주자대표회의와 부녀회와의 다툼은 매우 심각하다고 하겠다. 여기에다 입주자대표회의 자체에 대한 문제점, 즉 동대표의 자질과 역량이 부족하거나 일부 동대표와 업체가 비리에 연류된 점도 심각한 문제이다. 또한 외부적으로는 동대표를 봉사직으로만 국한시킨 채, 그들에게 아무런 지원을 하지 않는 것에도 문제가 있다.

따라서 아파트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선결조건은 입주자대표회의의 합리적인 구성과 운영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각 분야의 능력 있는 전문가 그룹과 청렴하고 신뢰받는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야 하고, 그들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이 절실하다는 점은 전문가의 공통된 의견이다. 또한 지자체에서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대상이 종전의 시설의 유지 또는 보수 등의 물질적인 지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걸음 나아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아파트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생활 관리의 지원으로 전환되어야만 한다.

군포시는 전국에서 공동주택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아파트공동체문화의 형성은 주거생활의 질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아파트공동체운동은 아파트 거주민

17) 군포여성민우회, 「총회 자료집」.

18) 곽도, 2006, 「주민중심형 아파트공동체활성화 방안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6쪽.

들이 직접 참여하는 시민운동이며, 살기 좋은 아파트마을을 만들기 위한 주민자치운동이다. 주민참여를 통하여 자율과 자치를 추구하고 문제를 해결하면서 목표를 달성하는 기술을 터득하게 된다. 공동의 문제해결을 위해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단결과 협력이 촉진되고, 참여하는 시민들의 유대가 강화되면서 공동체의식은 배양이 된다.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일구어 나가는 아파트공동체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발전은 물론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 아닐 수 없다. 아파트공동체운동은 희망과 보람과 도전의 시대를 열기 위한 새로운 국민운동으로 승화 발전시켜야 할 가장 값진 애국운동이기도 하다.

YAMAHA